

제332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 사무처

2015년4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9
2.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우원식·강기정·강동원·강석호·강창일·權垠希·길정우·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기선·김기식·김기준·김동철·김명연·김민기·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세연·김승남·김영록·김영주·김영환·김용익·김우남·김운덕·김을동·김재윤·김제남·김정록·김춘진·김태년·김태원·김한길·김현·김현미·남인순·노영민·노웅래·도종환·문병호·문재인·문희상·민병두·민병주·민홍철·박광운·박기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병석·박수현·박영선·박완주·박원석·박주선·박지원·박혜자·박홍근·배재정·백군기·백재현·변재일·부좌현·서기호·서영교·서용교·설훈·송호창·신경민·신계륜·신기남·신의진·신정훈·신학용·심상정·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철수·양승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희·유은혜·유인태·윤관석·윤재옥·윤호중·윤후덕·은수미·이강후·이개호·이노근·이명수·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언주·이원욱·이윤석·이이재·이인영·이종걸·이주영·이찬열·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현승·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병완·장하나·전병헌·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두언·정병국·정성호·정세균·정수성·정진후·정청래·정호준·조경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성준·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하태경·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인자·황주홍 의원 발의) 9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10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묵념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주년을 맞아서 인명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지금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희생자의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 155인으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1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질문을 실시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정읍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의원**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 꼭 1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찬 바닷속에는 아홉 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야기한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참사 1년째,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초대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도 실패했고 사후 수습도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늘까지도 인양 문제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특별법 대통령령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야당 측 간사와 후보로 만났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오늘은 저는 우리당 세월호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또 국무총리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타깝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끝난 것 같다’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짐작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유성엽 의원** 총리의 고향 마을인 청양군 비봉면 양사2리 주민들의 총리에 대한 걱정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 오늘 아침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봤습니다.

○**유성엽 의원** 어떤 내용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뭐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 기사 중에서 하나 쇼킹한 것이 2013년도 4월 4일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성엽 의원** 그 당시에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그 증언에 의하면, 그동안 총리께서는 ‘한 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 그날 상황 관련해서 또 ‘기억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성완중 회장과 총리와의 어떤 만남, 독대를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또 기사를 보기 전에 어제 대정부질문 끝나고 지역구에 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말씀, 답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날 등록 첫날이기 때문에, 또 도청

개청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기사, 그러면 수행비서 기사 그 말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그런 사실을, 그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또 본 사람도 있고 해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현재.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났느냐고요, 총리가?」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유성엽 의원** 총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을 하는 분이 운전기사거든요. 운전기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증언을 했어요, 오늘 언론보도에.

뭐 이것도 부정을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거기는 운전비서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구당은 여직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개된 장소니까요. 운전기사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구 사무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여러……

○**유성엽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말씀이지요,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 또 옆에 증언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면 ‘독대한 적이 없다’라는 등 딱 잡아떼고, 또 그 증언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왜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리한 것은 부인을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이 일관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선거 때 사무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기사 이외의 비서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죽 알아보니까 봤다는 분도 있고 기사를 포함해서, 또 못 봤다는 사람이 있고……

○**유성엽 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의 상황을 보면 고향 주민들도 총리를 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향 주민들도 버렸다’ 그런 말씀은 과한 말씀 같습니다.

○**유성엽 의원** 보세요.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지역구가 있지만은 지역구 의원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유성엽 의원** 지금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뭐 하러 나오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사람의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를……

○**유성엽 의원** 지금은 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성엽 의원** 고향 주민들의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왔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유성엽 의원** ‘안타깝다’,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끝난 것 같다’, ‘질질 끌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중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향 주민들까지……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뭐 의원님 말씀이지만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비례대표한테는 함부로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성엽 의원** 비례대표는 전 국민이 유권자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은……

○**유성엽 의원** 자꾸 지역구 의원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총리로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비례와 지역구 구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적어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조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총리로서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성엽 의원** 조심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뭐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유성엽 의원**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박근혜 경선자금 수사 제1호가 이완구 총리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경선자금 수사 1호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성엽 의원** 이번에 전·현직 비서실장, 국무총리 또 대선 경선 당시의 각종 본부장들이 개입된 이 사건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 경선자금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유성엽 의원** 경선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뭐가 들어갔다고요?

○**유성엽 의원** 경선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수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정을 지을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총리의 통할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행정적인 측면에서 통할을 받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통할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뭐니까, 구체적으로 통할이라는 의미?

○**법무부장관 황교안** 총리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처의 일원으로 통할을 받는 것이고……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할의 의미가 뭐냐, 구체적인 통할의 의미? 통할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통할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통할의 의미.

○**법무부장관 황교안** 사전적 의미를 물으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물으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헌법에 나와 있는 이 통할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통할은 그 자체가 통할이지요. 뭘, 어떤……

○**유성엽 의원** 그러면 사전적 의미라도 이야기를 해 보세요.

통할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통틀어서 지휘 관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성엽 의원**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시를 받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도 감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유성엽 의원** 좋습니다.

검사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사는……

○**유성엽 의원** 소속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속 상급자가 있고 또 총장이 있고, 그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지휘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 그러면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금 수사 대상 1호로 정해진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 대상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사해서 철저히 자료를 수집한 뒤에……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1번으로 수사받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황교안**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준비가 돼야 수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출국하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출국하시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의해서 각 부처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법무부에 대해서는 통할을 하지 말도록 해 달라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는 법대로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유성엽 의원** 아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총리가 지금 수사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에 1번으로 들어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총리는 장관을 통해서,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지휘할 수 있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총리께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유성엽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거론하면서 엄정한 수사, 과제 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참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본인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마치 본인이나 본인 측근 실체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3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야기해서 참 섭섭하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통할을 중지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외국으로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의 행정 사무에 관해서 통할하는 것이지 수사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받지도 않을 겁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판에 박힌 이야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도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하여튼 오늘 대통령 출국하시기 전에 이번 수사를 정말 엄정하게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총리의 통할 대상 중에서 법무부장관, 나는 좀 빼 달라, 그래야 엄정하게 수사가 가능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게 주어진 책임하에서 검찰을 지휘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무총리 사퇴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오늘 앞에서 답변한 것 보면 사퇴할 뜻이 조금도 없어요, 스스로. 대통령도 면직시

킬 뜻이 전혀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수사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국무총리나를 통할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야 몇몇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외부적인 어떤 조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검찰에서는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당연히 공정하게는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통할하는 장관을 통해서 특별수사팀한테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 이걸 걱정하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우리 검찰 업무에는 행정 업무가 있고 수사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통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업무에 관해서는 통할할 수 없습니다. 없도록 장관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도 검찰에 지휘할 때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총장에게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오셨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차관입니다.

○**유성엽 의원** 차관 나오세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지금 그걸 보면 해수부장관이 제안자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과거에 이런 성격의 위원회의 시행령에 대해서 대개 주무부 장관이 그 업무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 해수부장관이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그 조사위원회의 성격은 뭡니까? 일반적 위원회입니까, 독립된 위원회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법 9조에 위원의 독립

과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해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 표현이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정부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해수부장관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대통령령 그걸 입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이 이와 유사한 정부 각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성격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무부 장관으로 시행령을 제안을 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그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유성엽 의원** 지금 현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도 속하지 않은 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국회에도 소속된 것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법원에도 소속된 것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유성엽 의원** 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이 없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유성엽 의원** 그러면 누가 발의를 해야 합니까? 그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누가 발의해야 합니까? 그 법안을 누가 제안을 해야 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지금 그 법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에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행정자치부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입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시행령의 성격이, 통상 시행령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의 내용이 있고, 직제와 조

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주무 부처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고요 직제와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만듭니다.

그래서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령이 직제와 조직은 별도로 직제령에 의해 가지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제령을 만들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안을 했고 시행령 자체는 운영에 관한 것만 담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발의해 주는 게 원칙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소속 기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유성엽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안하고 발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정부 서무 부처로서 주무부가 없을 경우에만 그렇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무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 제안을 해야 맞는 건데 왜 해수부장관이 저렇게 들고 다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은 직제 정원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보호와 같은 이 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를 보면 통상 주무부 장관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수부 하부기관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아닙니다.

○**유성엽 의원** 해수부장관 소속기관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아닙니다.

○**유성엽 의원** 소속이 아니잖아요, 해수부장관? 아까 주무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해수부장관이 이 특별

법 시행령안을 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내에서 그 소관 업무를 지원하고 담당하는 부처는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이렇게 해수부장관이……

○**유성엽 의원** 들어가시고, 총리 어디 갔습니까? 총리 나와 주세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총리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당사자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특별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진상규명을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그리고 추모와 함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유성엽 의원** 그 특별법을 왜 만들었냐면 말이지요, 뭐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월호 참사는 미증유의 국가 재난이다, 그런데 그 재난의 책임이 민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비리 또 세월호 구조 실패, 대응의 부적정성 이런 문제를 정부한테 맡겨 가지고는 조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법을 만든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특별조사위원회도 그래서 만든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법원으로부터도 국회로부터도 독립된 조사위원회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의원** 예, 그런데 아주 단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조 기억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성엽 의원** 특별법 21조 기억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법조문까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전체적인 흐름은 압니다만……

○**유성엽 의원** 이런 것은 뭐 기억하기 쉽잖아요, 당사자였고.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도 이해가 좀 가지만 이것은 뭐 기억하기 쉽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21조까지 제가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21조에 보면 이런 규정입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인데 특조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성엽 의원**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부가 다룰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해양수산부안에는, 사무처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1급 기획조정실장을 해수부가 파견을 시키는 것으로 시행령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그 21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특조위원장, 이석태 위원장이 1급 해수부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구체적인 개개 공무원의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하고……

○**유성엽 의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지난번에 해수부가 추진하는 대통령령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관회의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조직 자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구성이 돼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점과 함께……

○**유성엽 의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과다하게 구성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한 40여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측면에서 조사 기능에 그리고 통괄하는, 이른바 조직의 국장 레벨에 있는 그 통괄하는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수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진상규명의 어떤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1번 조사 대상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물론 해수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성엽 의원 그러면 조사 대상이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은 특별법 취지에 또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 공무원을 같이 이렇게 혼재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렇게 혼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협상을 할 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을 전부 별정직 외부에서 쓰라는 전제 속에서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때는 일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섞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이.

○국무총리 이완구 예,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직 운영이라든가 예산 요구라고 하는 그런 실무적 차원에서의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조직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하면 주관 부서가 어디 같습니까, 가장 1번으로 생각나는 데가?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그것은 현재 조직편제 상으로는 국무총리실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면 가장 1번 부서가 어디 같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요?

○유성엽 의원 법무부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성엽 의원 그런데 법무부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가장 많은 부서일 수도 있다라는 고려 때문에 법무부가 그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떻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의를 한 겁니다. 국무총리가 발의를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해서는.

그렇듯이 지금 가장 특별조사위원회 1번 조사 대상 기관인 해수부장관이 그 특별법 시행령을

들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특별법 만든 당사자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아시다시피 소관을, 굳이 부처를 따지자면 해수부가 맞지 않습니까, 이 법이? 따라서 해수부 관련법으로 보고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그러한……

○유성엽 의원 이 법이 해수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편의상 우리 농해수 상임위를 거쳐 가지고 간 거고 그 당시 초기에도 농해수위를 가야 할 거냐, 안행위를 가야 할 거냐, 운영위를 가야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그러나 그냥 여러 가지 형식적인 편제상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해 달라. 솔직히 우리 농해수위에서 구체적으로 수정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TF팀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 농해수위를 통해서 갔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 특별법이 해수부 관장 법률이다, 이게 잘못 인식을 한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걸……

○유성엽 의원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하고 소관 부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야.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만 지금 상임위원회가 농해수……

○유성엽 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법원 소속도 아니고 국회 소속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장관 소속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런 이 특별법의 운영 주체가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별법 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이걸 정면으로 위배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면 해수부가 아니면 의원님께서 어느 부처로……

○유성엽 의원 법제처장 한번 불러서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이렇게 소속이 없는 경우는 누가 해야 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번 법제처장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법제업무 편람에 다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법제처장하고 협의를……

○유성엽 의원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잘못된 시행령 추진으로 오늘 유가족들께서 추모제에 참석도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 해수부가 추진하는 그 시행령, 대통령령 추진은 추진 주체에 있어서, 추진 절차에 있어서, 추진 내용에 있어서 정면으로 특별법 취지에 위배되는 잘못된 시행령 추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법제처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빠른 것, 너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이질 질의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참 한심한 국회의원이고 한심한 국회구나’ 이 생각을 가졌는데, 왜 해수부가 옳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데 본질적으로 행자부다 해수부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규명하니까. 그러나……

○유성엽 의원 그렇게 안이한 인식을 가지니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유성엽 의원 특조위안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는 형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지만 지금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인데, 농해수에서 처리해 가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데 그것을 해수부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의원님들 계십니까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 가지고 거기서 상임위를 경유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으면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유성엽 의원 그것은 대단히 정말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다는 것 자체를 아주 부끄럽게 아셔야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한번……

○유성엽 의원 법제처장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물어보고 언제까지 답변 주시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오전 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저는 지금이라도 해수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안 즉각 철회하고, 특조위에서 이미 2월 달에 시행령안을 만들었어요. 그 안을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주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발의하면 내일이라도 의결이 가능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성엽 의원 답변을 바로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유족들이 오늘 추모제에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0시42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김명연 의원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상정하고 이것을 먼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 (우원식 · 강기정 · 강동원 · 강석호 · 강창일 ·
- 권垠희 · 길정우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진 ·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철 · 김명연 ·
- 김민기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주 · 김세연 ·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주 · 김영환 · 김용익 ·
- 김우남 · 김윤덕 · 김을동 · 김재윤 · 김제남 ·
- 김정록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원 · 김한길 ·
- 김현 · 김현미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도종환·문병호·문재인·문희상·민병두·민병주·민홍철·박광운·박기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병석·박수현·박영선·박완주·박원석·박주선·박지원·박혜자·박홍근·배재정·백근기·백재현·변재일·부좌현·서기호·서영교·서용교·설훈·송호창·신경민·신계륜·신기남·신의진·신정훈·신학용·심상정·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철수·양승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희·유은혜·유인태·윤관석·윤재옥·윤호중·윤후덕·은수미·이강후·이개호·이노근·이명수·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연주·이원욱·이윤석·이이재·이인영·이종걸·이주영·이찬열·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헌승·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병완·장하나·전병헌·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두언·정병국·정성호·정세균·정수성·정진후·정청래·정호준·조경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성준·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하태경·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중학·황인자·황주홍 의원 발의)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유성엽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작년 11월 수색작업의 종료 후 실종자 시신의 수습 및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인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 및 인양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삶을 정상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지고 실종자 모두를 수습하는 모

습을 보이며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정의화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산 단원구갑 출신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실종자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연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어둡고 깊은 세월호 안에 있을 아홉 분의 실종자와 유가족분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2학년 1반 조은화 학생, 2반 허다운 학생, 6반의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권재근 님과 그 아들 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님, 이렇게 아홉 분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일념으로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언제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연 의원 심각한 건 인식은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의원 정부가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 심리 치료를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이 자해를 시도했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생존자 두 분, 유가족 두 분, 친인척 한 분 그리고 생존 학생, 6명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세월호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안산온마음센터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10명 가운데 6명의 유가족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 얘기입니까?

총리님께서서는 세월호의 참사에서 국가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지요. 국가가 많은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연 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이분들에 대한 치료,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김명연 의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제한 기간, 이것은 좀 수정해서 보완하고 국가가 안전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야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지금 신체 부분은 한 1년 정도, 정신질환은 한 5년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심리 치료는 트라우마센터에서 기간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예.

이 문제가 비단 유가족에게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4월 9일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반 사회심리 및 안전인식도 조사를 보니까 안산주민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데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또 정부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이완구 정부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이것을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는 문구 하나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자체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보면 예산 부족하지요. 우선 가용예산 중에서 쓸 일이 태산인데 어느 단체장이 여기부터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이 흐지부지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정부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면 이런 국가적인 참사에서 생기는 트라우마는 국가

가 반드시 책임지고 치료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각종 대재앙, 기후변화에 의한 재앙, 모든 참사로부터 각종 유형의 트라우마가 발생되지요. 이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연구하고 치료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냈다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 책임이지 당장 아프니까 치료해 주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국가가 대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지금 제주도에서도 스물네 분의 생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 한 분, 과란바지 입고 학생들 한 20명 정도 구하고 했던, 주민들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김동수 씨, 이 사람이 자해한, 동맥을 끊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명연 의원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이 잠을 못 자고 환청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제주도를 가 봤습니다. 상가에 조그만 상담소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정신과 전문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존에 있던 금연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한 번 말이 터지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답답했던 순간들을 다 쏟아 내야지 자기가 치료가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를서 항공권을 좀 지원해 주고 해서 안산으로 와요. 그런데 안산 트라우마 온마음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 허비하는 시간이 왕복 14시간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프로그램 하나두 개 소화하고 깜깜한 여관방에서 자다가 쓸쓸하게 제주도로 갑니다. 이분들이 또다시 그런 자해를 시도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봅니까?

이 정부는 누구 하나 죽어야지 그제서야 이것 해야겠구나 하고 움직이지 미리 이런 시도가, 조짐이 보이면 ‘아, 안 되겠구나’ 하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주도의 분소 문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이것 만들어 주시면 제주도에 현재 4·3 희생자 유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강정마을 같은 데는 한 마을 사람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수백 년을 같이 살다가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분소 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안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 참사 이후에, 총리님 안산과 진도의 지역경제가 말없이 침체됐는데 자세한 상황을 좀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구체적으로 상권이라든가 경제상황은 아직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지역상권이 상당히 위축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지난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진도군의 상권 피해가 89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도군 하면 우리가 보배섬 그리고 굉장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낙인효과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거지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안산시 자체에서 중심상권을 조사해 봤더니 매출액이 보통 40% 이상씩 다 떨어지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 상황에서 1년을 버틴 거예요. 하다 보니 주민들의 민심이 이제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 세월호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안타까워하고 울어 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기피하고 멀리 가고, 국민들끼리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적극 개입해 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 주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이 하나구나’ 하는 인식이 되는 거지요.

이런 조치를 총리께서 해당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많은 분들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재난안전 분야 그리고 응급의료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지난 1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사고 초기에, 총리님 진도 팽목항에 본 의원이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대응체계를 보

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구급·구조 요원들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에, 시점에 딱 자리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취재진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막 거기 혼란을 시키려 하는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자리를 차지해야 할 의료진들 그리고 구급진들은, 구조대원들은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국가가 그만큼 혼란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통제해야 될 사람들이 가서 구역을 정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딱딱 정해 놓고 이것을 통제해 주는 그런 국가의 장악력 이것이 안 보였던 거지요.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평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미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연 의원** 아직도 미진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명연 의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안에 사람이 있다, 구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조요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가장 위급하고 분초를 다투는 아주 위급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응급의학전문가가 없어요, 전문의가.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게 정부대책이에요. 이래서 과다출혈이나 적극적인, 골든타임을 놓쳐 갖고 많은 인명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사고 현장이나.

그래서 본 의원이 외국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수술이 가능하고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전문의를 주도할 수 있는 이동형 병원 같은 것들을 선진국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됐다가 막판에 삭감됐어요. 한 400억 정도 들어가면 국책연구소 이런 데 건적을 받아 보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보니까 가능한데 이것을 국가가 너무 인색하게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 만들어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구하면 이것으로서 당연히 도리를 하는 건데 왜 국가가 이것에 그렇게 인색한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총리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2015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가 만나서 또 협의를 할 텐데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개입을 좀 해 갖고, 국민 정서로 보나 세월호의 사고 수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나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세월호 수습을 하고 복귀하던 강원 소방헬기가 광주 인근에서 추락해서 다섯 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3일에는 가거도 인근에서 해경이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갔다가 또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리한 운항에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체계에도.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헬기 5대 중의 1대가, 즉 20%가 20년 넘은 노후 헬기예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명연 의원** 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데 이렇게 노후된 헬기들이 그런 현장에 막 다니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교체해주지 않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아마 응급헬기가 전체적으로 8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불, 소방, 닥터 헬기, 해경 등등 해서. 그래서 83대인데 전체적으로 조사는 돼 있지요, 연령?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돼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그러면 그 교체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100여 대에 가까운 헬리콥터가 각 기능별로 보유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교체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이것은 기본적인 수치를, 닥터 헬기 4대, 국방 5대, 국민안전처 44대, 산림청 30대 이 수치를 총리님께서 숙지하시고 직접 챙기시면 이 업무가 빨리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 문제를 좀 하면 그동안 진도에 있을 때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이 전부 거기 내려가서 있을 때 어린 자녀를 둔 집들이 참 난감했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먹고사는 문제도. 그럴 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가족 중의 아이 돌봄 그리고 노령화되신 분들 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 그때 48가구를 케어해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개념으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좀 챙겨 주셔야겠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완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장관님 본 의원과 함께 진도 팽목항에서 응급의학전문 의사가 없어 가지고 찢찢맨 것 생생하게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의원 우리나라 국립병원은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병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응급의학전문 의사가 한 명도 없지요, 9개 중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거기에는……

○김명연 의원 국립병원 9개 중에 응급의학전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다 이러면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민간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병원 역시 진료 스케줄 이런 것 때문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의학전문 의사가 필요한 잠수 바지선 이쪽에 오지 못해 가지고 찢찢맨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떤 제도로 그것을 확보하겠다는 저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20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저희가 디매트(DMAT)라고 해서 재난응급의료팀을 3개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출동시스템을 짜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개에서 41개로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의원 반드시 하셔 가지고 대응매뉴얼,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 오면 안 되게끔 체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응급의학전문 의사가 적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수련의 보조수당 50만 원씩 주는 것 가지고 유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오겠습니까? 그 이상의 인센티브 이걸 확보해서 재난 시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분열을 조장하거나 나만 옳다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월호를 집단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유혹도 이제는 과감히 떨쳐 내야 합니다.

세월호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한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모두 우리의 선한 이웃이고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명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입니다.

2014년 오늘 정부의 무능으로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친박 실세의 비리 게이트에 국민의 신뢰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완중 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유일한 무기라던 도덕성은 이미 깨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정말 보기 드문 사심 없는 분이라 옹호하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국무총리까지 연루되었습니다. 어물쩍 덮고 넘어가고자 한

다면 국민의 분노는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과 박근혜정부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충고 드립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유대운 의원 총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성완중 전 회장을 만난 기억도 없고 절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만난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운 의원 어쨌든 기억을 다 모르실 겁니다, 요즘 상황으로 볼 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오늘 아침 CBS 보도를 보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유대운 의원 보지는 못 하시고?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A씨가 4월 4일에 분명 성완중 전 회장과 독대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를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A씨요?

○유대운 의원 운전기사를.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잘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 3개월 저와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유대운 의원 잘못된 게 없으신데 기사에 이름이 나오니 A씨에게 궁금해서 전화해 보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전화 안 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먼저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통화했던 것과는 상호 다른 점이 좀 있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때는 친분관계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후로 보니 친분관계가 있어서 전화해도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접했습

니다마는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운 의원 이제 성 전 회장을 독대했던 사실이 기억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선거사무소에는 비서 내지는 조력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하는 건 아니지요. 운전, 비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분이신데, 어제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고 계시고 또 한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 총리는 그동안 한 3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말을 자꾸 바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그 내용의 어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큰 틀을 거짓말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오늘 대형 일간지에서 총리의 본회의장 말 바꾸기, 변명 이것을 전부 정리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짧은 몇 초간의 답변에서 약간 틀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유대운 의원 아, 그런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큰 흐름에서 제가 답변의 내용을 바꿨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대운 의원 보도된 내용의 언론을 신뢰하지 않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보도한 언론기관을 신뢰하지 않느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말씀,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습니까?

거짓말도 말 바꾸기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어디까지 버틸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이 문제는 버팀의 문

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국민의 대변자로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총리에게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지금 부여·청양의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국민이 보고 있는 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할 의무가 상호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국회의원 자리는 지역주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국민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국민은 법적으로는 국무총리로 있지만 총리로서의 자격을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질문했습니다.

총리 내려놓으실 생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한 분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올렸습시다하는 여러 가지 의도에서 만약 그 진술과 메모가 만들어졌다면 그 또한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운 의원** 그 부분도 국민이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오후에 남미로 출국하십니다.

자원외교의 중심에 있던 최경환 부총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도피성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부재 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총리는 물론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붙잡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국무총리, 국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국정 운영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에 대단히 미안하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지요, 국민에게 어쨌든 진실은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지겠지만 국민을 매우 혼란과 실망으로 빠뜨린 이 내용은, 그 책임은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면하기 어렵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유대운 의원** 총리와 저는 국회운영위와 안행위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충남, 청양 출신이고 저는 서산 출신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서산 출신인 것 압니다.

○**유대운 의원** 총리께서는 그동안에 활동해 오면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유대운 의원**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와는 단 한 번도 식사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두 차례,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 열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줄 알았던 성완종 전 회장과는 어떻게 20개월 동안 스물세 번이나 만나고 열두 번의 식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유대운 의원님과 접촉이 없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대여섯 차례 뵈고자 했으나 유대운 의원님이나 또는 야당 원내대표 측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인과 20개월 동안에 스물세 차례 만났다는 것은 고인이 우리 당 충청남도 도당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의원 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는 것은…… 서산과 청양과 홍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접 군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향,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후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그분은 또 평의원이고 저는 원내대표인데 스물세 번, 20개월 동안에 귀빈식당이라든가 또는 의원회관이라든가 또는 국회 바깥의 식당에서 월 한 번 만나는 것은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가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고인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 선거법, 그리고 서산의 지방선거 공천이 아주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얘기가 주로였고 개인적 얘기는 나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친교가, 친하지 않다라고 한 의미는 마침 의원님께서 서산 출신, 고인과 같은 동향이시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친하다, 안 친하다는 것은 같은 소속 의원이라도 속내, 개인적인 문제를 내놓느냐 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의원님께서 같은 서산에 있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 그리고 중진 의원이라는 직함, 그리고 총리의 물망에 오르는 아주 큰 정치인, 이 정도 되면 한 사람만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 애로, 요구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 경청하고 새겨들고 그리고 정치에 반영하고, 그것이 큰 정치인들이 할 일 아닌가요? 20개월 동안에 스물세 차례 만나서 열두 번 함께 식사하면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편중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의심받을 만한 대목이다, 의심받기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고인과 식사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 비망록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본인이 약속을 했고 제가 원내대표 자리니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운 의원 거기까지 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고.

야당 의원 말씀하셨는데 야당 원내대표님 방에 열댓 번을 갈 정도로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이 대목은 거기까지 하고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메모에 이름이 있었냐는 질문에 ‘성 전 회장이 서운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총리의 말씀대로 전혀 친하지 않고 저 같은 당 동료였을 뿐이라면, 그저 같은 당 동료였을 뿐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하시라는 말에 왜 고 성 전 회장은 그렇게 섭섭해 했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오늘 아침에 녹취록 전문이 나온 것을 보면 몇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을 고인께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완구 총리가 의식을 해서 본인을 사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담긴 그런 녹취록을 제가 접한 바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자원개발 수사와 관련해서 총리가 청와대와 합작을 해서 고인을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 줬는데 총리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본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더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무튼 저에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갖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 섭섭함은 뭔가에 본인의 한이 맺힌, 그리고 그동안 관계의 대가에 따른 배신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목숨을 끊어 가면서 한 말이, 과연 고인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에 무게를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이렇게……

○유대운 의원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기로 하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앞으로 조사가 되면 나오겠지만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전에 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또 있다 했을 때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 들어와서 스물세 번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망자와 저와의 친소관계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운 의원 질의 답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야 의원들

막론하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습니다. '성 전 회장을 도와 달라 했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등의 답변도 하셨습니다.

저는 성완중 전 회장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이자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원하신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고향 선배인 저보다 총리를 훨씬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무튼 저는 고인으로부터 기업인 때나 또는 2014년 후에 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받은 적이 없고, 의원들 그 말씀은 고인께서 평소에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광범위한 수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덟 분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명이 됐으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단순한 여덟 사람에게 국한하지 않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알겠고요.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총리는 성완중 전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유대운 의원 대국민 협박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대국민 협박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한 나라의 총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이 있고 저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의원 개인적인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납니다. 총리는 개인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은 제가 정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이것은 곧 또 검찰을 협박하는 내용도 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운 의원 아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제가 너무 격해서 저의 속내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은 적절치 않았습니까마는……

○유대운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것도 총리의 자리에서. 그건 매우 부적절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국민들이 두 번째 실망하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유대운 의원 잘못하신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 올린 대로 저도 다소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

○유대운 의원 그러니까 그 발언은 잘못하신 것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압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양심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날 걱정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유대운 의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잘 판단합니다, 어떤 대목이 맞고 어떤 대목이 틀린지를.

여기서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내용들, 태안군의회, 저도 알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운 의원 잘은 알지 못하고요, 이분들은.

충남지사를 하실 때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태안군의회 의장이신 분이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통상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도의원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관계를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기초의회 의원과 그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꽃박람회를 시작했던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의 만형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군과 제 지역구였던 홍성군과는 바로 붙은 군 아니겠습니까?

○**유대운 의원** 잘 압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성 출신 국회의원이 서산의, 제가 15·16대 국회의원 할 당시에 서산의 군의장이나 군의원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바로 붙은 군인데요.

그래서 이용희 군의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드릴 수 있고 또 받을 정도로. 그것은 서산과 태안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분명한 얘기지요.

○**유대운 의원** 좋습니다.

총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자 토요일 새벽 6시~7시 사이에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열다섯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고 세 번을 통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궁금하셨던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처음에 눈을 뜨니 중앙일보에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고 하고 말씀이 있었다는 짤막한 보도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분이 이용희 태안군의장이다,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접하고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6시~7시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리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업무를 봐야 되니까 생각날 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세 번째 말씀에…… 그분이 착각한 거지요. ‘총리님, 잘 아시는 김 모 의원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한번 같이 들었으니 물어보시지요’ 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모 의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딱 한 통화를 했습니다, 김 모 의원하고는, 김진권 의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네 통화는 통화했고 나머지는 신

호가 간 게 열 통화인가 이렇게 오전과 오후까지 된 것이니까 통화를 열댓 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렸고.

어제 MBN 종편에서 이용희 군의장님 인터뷰를 땀 것을 보니까, 어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총리가 순수하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니까 참 안됐다’라고 하는 MBN 뉴스 그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 어쨌든 성 회장 사망으로 인한 본 건과 총리와 의 연계가 국민이 판단해도, 본 의원이 판단해도 참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실 거고요.

열다섯 번이나 시도해서 세 번을 통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정말 초조했던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한 것 아닌가, 그것을,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 준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선출직 국회의원이 십니다마는 의원님 발언을 한 분이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제가 다른 비서관을 통했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충분히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를 좀 확인했으면 더 적절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와 보니까.

○**유대운 의원** 그렇지요? 심사숙고 좀 하셨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불거지지 않는 않았을 텐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대운 의원**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게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인정보다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운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일 먼저 사정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사정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서 계실 만큼 당당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40년 공직 생활 동안 한 번도 금품과 관련해서 있었던 말은 없습니

다.

그리고 2010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96년 15대 선거 때, 국회의원 때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내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제 이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게 2009년, 10년 이 어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가 권익위원회에 조사된 자료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대운 의원**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와 국민은 총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물러나라는 여론이 많다면……

지금 사실상 국가 권력서열 2위로서 살아 있는 권력 중 가장 힘이 있는 분이예요. 이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오해를 받거나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국민의 의구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나 그 못지않게 총리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린 대로 고인에 대한 대단히 참 애도의 뜻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고인의 말씀 한마디와 메모 하나로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유대운 의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오늘 4일째 계속 말을 뒤엎어서 바꾸고 그러시는데 진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진부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대운 의원** 충청도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럴, 그런 것 같기도’……

보통 ‘글쎄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부끄러워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청도를 비하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유대운 의원** 조용히 좀 들어 보십시오.

정책질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조사 특별법 시행령을 엉터리로 만들었지요, 공무원 다 채워요? 일 안 하려고,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소 유가족들의 요망 사항이 반영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운 의원** 대통령도 재지시했습니다.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도 차관회의에 이 문제 처리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요즘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총리가.

어제 지시했습니다. 시행령 재검토하라……

○**국무총리 이완구** 예, 9일 날 저는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어느 정도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바꾸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피아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내놔야 될 총리께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꾸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수정·보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 대통령도 지시했잖아요, 어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 바꾸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고개를 끄덕임)

○**유대운 의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고개로 하지 말고.

바꾸실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와 국무총리 답변을 잘 들으셨

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갑윤 수고했습니다.

유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가슴 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맹골수도의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아홉분의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를 마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안전문제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인재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부패와 적폐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기업인의 죽음과 그분이 작성한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해지고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장관,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안전처차관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현재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좀 미흡하다고 전부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또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정책 총괄 조정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데 그 임무와 역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장관께서는 지난해 11월에 취임 하셨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현재 장관은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차관이 대리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효대 의원 장관 취임한 이후에 대형 안전사고 몇 건 일어났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또 강화도 캠핑장 안전사고 등 여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효대 의원 이 정도쯤 되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안전관리체계를 다시 정립을 하고 또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동참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눈높이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기대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안전처 출범 이후 언론에서 보도된 주요 사고는 대부분 다 인재였고요. 아파트 화재, 공사장 붕괴 등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재발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제로 한 언론매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

리 대응능력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향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국민 동참하에 현재는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안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생활화돼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과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이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지난 3월 말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의 실현을 위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30조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대 의원** 30조 원이 넘는 이 예산이 아직도 연도별 세부항목별 예산 수립과 조달방법조차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사업 내용을 보면 법령 제·개정 세부과제 선정을 두고 타 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장관,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현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거쳐서 대략적인…… 30조, 5년간 30조가 투입되도록 예산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연도에 재정 당국과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이번에는 국무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총리님 소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 이……

○**안호대 의원** 소회란 성완중 리스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국무총리 이완구** 아무튼 우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유야 어찌 됐든, 경위야 어찌 됐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어제든 올렸습시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올립니다.

다만 실체적 진실이 어떤지 저도 대단히 혼란스럽습시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제 입장을 어제 의원님들께 말씀 올린 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요. 지금 총리께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셨는데 또 정당한 말씀도 하셨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국민들의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의 사실과 인식의 차이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답은 빨리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털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호대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 중에 50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보면 150명 중에 58명의 공무원이 있었어요. 또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역시 공무원들이 4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러 가는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국회에서도 이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안행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라고 해서 해양수산위원회에 온 것입니다. 당연히 해양수산위원회에 오면 그 시행령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드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효대 의원 그러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각계각층 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안효대 의원 대한민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좀 낮은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삼십몇 개국 나라 중에서 우리가 이십한 칠팔 위쯤 안 될까 싶은데요.

○안효대 의원 OECD 34개국 중 27위 정도 됩니다. 거의 하위 수준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문제는 몇 년째 답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팔당댐, 충청권에는 대청댐, 전북은 용담댐, 전남은 주암댐 등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유독 부산·대구·울산, 영남권만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낙동강 물을 먹고 있습니다. 왜 영남권만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작년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외에 가지적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가지적인 추진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효대 의원 그것도 보면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안효대 의원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

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영남권의 물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는 거지만 울산의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총리님, 반구대 암각화 풍화 5단계 중에 몇 단계 정도 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이게 한 네다섯 개, 4단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안효대 의원 예, 4단계에 와 있습니다. 4단계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충격만 주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가 지정된 지가 1995년이니까 지금 금년도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는다고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존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효대 의원 이것 정말 문화인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14년에도 보면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그 당시에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을 체결해서 반구대 암각화 보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지연으로 모형실험과 설계 용역이 늦어졌고, 급기야 올 3월 개최된 기술검증단 회의에서는 검증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물막이……

○안효대 의원 그 당시에 공론화될 때도……

○국무총리 이완구 물막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효대 의원 공론화될 때도 안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공절차가 지연되고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안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가변형 물막이, 안전 담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

○안효대 의원 총리,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물막이 공사를 좀 해서, 임시 물막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왜냐하면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 세계문화유산인데 소멸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한번 그 현장 방문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한번 방문하셔서 조속할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우리나라는 아이 키우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안호대 의원 얼마 전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이를 안 낳는 부부는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출산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본 의원은 아이 낳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 국가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잇을 만하면 언론 1면을 장식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불량급식 사건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폭력 및 학대 관련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2년의 135건이 지난해에는 28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예산 또한 증가되고 있지만 도대체 믿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라고 엄마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무장관, 책임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보다 아이들한테 안심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어린이집으로 바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얼마 전에는 한 어린이집이 곰팡이 핀 식자재를 사용해서 문제가 불거진 사건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안호대 의원 재발방지대책,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급식 관련해서는 식약처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는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들이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식약처하고 저희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이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 개선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원장의 도덕적 해이도 가장 큰 문제지만 본 의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 이 시스템 부재가 낳은 필연적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 100명 이상의 시설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100명 미만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에 유치원·어린이집이 한 5만 2500개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안호대 의원 100명 미만 시설이, 그중의 91.1%가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안호대 의원 이 91.1%를 지금 보면 급식위생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호대 의원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점검지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안호대 의원 그것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아마 개선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도 점검하고 난 다음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일어난 식자재에 곰팡이 났던 그 어린이집도 과거에 지적받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되면 페널티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페널티를 주게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하여튼 조속히 그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현장의 목소리는 그냥 지도 점검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현실인 거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장관, 혹시 ‘대한·민국·만세, 삼둥이’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세 쌍둥이 이름인데요. 아빠가 세 명의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돌보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안호대 의원 이 애들이 올해 만…… 4세 되는 애들입니다. 4세 되는 애들인데, 4세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9명을 한 분의 교사가 지도하고 있지요, 담당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안호대 의원 이 3명을 돌보는 데도 굉장히 힘든데 한 교사가 9명을 돌본다는 것이, 이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보면 한 애가 울면 애 우는 것 달래 줘야지요. 음식물 쏟으면 그것 정리해 줘야지요. 화장실 가면 따라 나옵니다. 또 달래야 되지요.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현장이 보육교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지적하신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아동학대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또 대체교사를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것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뭐 별로, 시설마다 조금씩 차별은 있습니다마는 150만 원 수준에서……

○안호대 의원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호대 의원 그리고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뭐 지금 8시간을 넘어서 12시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1분 1초도 쉴 수 없는 그 시간이, 10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 일일보육교사체험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뭐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한번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보육교사의 현장 또 보육의 현장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장관,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안호대 의원 지난해 민간영역에서 처음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이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안호대 의원 지난해 보면 300인 이상이 한 3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많습습니다.

○안호대 의원 그중에 보면 파견·용역·도급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 소속 외 근로자가 한 87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근로자의 한 20% 정도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호대 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두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 지붕 두 노동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처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안효대 의원** 이거 현장의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안효대 의원** 그래서 이 불합리한 차별 또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시급합니다.

○**안효대 의원** 이 방안을 한번, 조만간에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것도 역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우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비슷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있어서 가급적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같은 처우를 하도록 했고 복지도 기본적인 복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원청의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내 하도급업체 일을 해서 불법 파견 형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파견, 하도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해서 약 19개 업체에 대해서 1090명 정도를 직접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결렬이 돼서 타협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이런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대·중소 기업 간의 상생협력이랄지 또는 납품단가 조정 또 원청과 협력업체 간에 복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원청이 노력할 경우에, 또 그렇게 노력하도록 유도하면서 정부도 거기에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저희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효대 의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한 63.3%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국가 전체를 통계를 하면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효대 의원**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안효대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큰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안효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회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워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신 도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책 한 권 손에 들고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눈먼 자들의 국가’였습니다.

무엇에 눈이 멀었다는 걸까요? 돈에 눈이 먼 국가, 정치적 계산에 눈이 먼 국가, 연민과 수치에 눈을 감은 국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은영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연민은 정오의 그림자처럼 짧고 우리의 수치심은 자정의 그림자처럼 깁니다.

1년 전 오늘 세월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습니다. 여고생 다운이, 축구를 좋아했던 영인아, 권재근 씨 그리고 5살짜리 여동생에게 구명조끼

를 벗어 입혀 주던 아들 혁규도 있었습니다.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남현철·조은화·이영숙 님……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국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세월호 참사 전에도, 세월호 참사 후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가냐’고 유가족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난 1년간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년 전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께 독립된 진상 기구 설치, 투명한 정보공개 등등의 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여섯 가지 건의를 했고,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이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 약속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은 이미 지난해에 났다고 합니다.

총리님, 인양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술적인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발표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양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담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빨리 인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빨리 인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도종환 의원 오늘 아침에 안산 합동분향소에 가셨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유가족 대표의 인양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때 유가족 중 한 명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동안 내 자식 죽었어’라고 소리 치시는 것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들었습니다.

○도종환 의원 1년 동안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부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나 준비가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최선을 다했는데 유가족들이 어떻게 몸부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력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성의만큼은 최대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실종자가 떠나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유가족들이 말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오전에 채택한 결의안에 나오는 대로 무엇보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유가족들은 자식 잃은 아픔이, 가족을 잃은 아픔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동의합니다.

○도종환 의원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은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질 사람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 이걸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의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도종환 의원 지난 11일 광화문에서 희생자 형제자매 중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동생은 전교 1등이었고 안산시 애향장학생이였으며 대한민국 검사가 될 아이였습니다. 나는 평생 친구를 잃었고 나의 부모님은 삶의 일부를 잃었으며 이 나라는 귀한 인재를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리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종환 의원 우리가 고등학생 하나를 구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일하며 살아갈 50년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70년, 한 사람의 70년의 생애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개를 끄덕임)

○도종환 의원 무려 250명의 70년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25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답고 뜨거운 인생, 이들이 펼쳐 나갈 70년간의 무한한 가능성, 이들의 꿈, 이들의 행복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자식의 생명을 몇억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다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의 생명을 돈하고 바꾸자고 하면, 보상금이 이 정도니까 바꾸자고 하면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종환 의원 없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도종환 의원 4월이 되자 제일 먼저 보상금 액수부터 언론에 전한 이유는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건 특별법에 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이고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데 유가족들은 ‘보상금이 8억, 10억이니까 이거 받고 이제 좀 입 다물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러한 생각하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법에 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도종환 의원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우리 내면의 온갖 후진성이 부유물처럼 떠올라 와서 우리는 부끄럽고 참혹했었습니다.

단식으로 호소하는 유가족들 옆에 폭식으로 조롱하고 야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악마성,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누구 편이어야 합니까? 자식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이들을 조롱하는 이의 편이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마땅히 피해자와 유가족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의원 국가는 누구의 편이어야 합니까? 슬퍼하는 이들의 편이어야 합니까, 야유하는 이들의 편이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히 전자의 편이어야 됩니다.

○도종환 의원 약자의 편이어야 합니까, 악마의 편이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약자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의원 자식 잃은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2000리를 걸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몸속에 슬픔의 지도를 새기고 있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정치적 계산이 많았고 유불리를 따져야 했고 그리고 무능했습니다. 무기력한 채 1년을 보냈다고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국가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도종환 의원 국가로부터 위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좀 있었겠지요.

○도종환 의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정치인들로부터 위로를 받던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종환 의원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까? 좀 있는데 저렇게 삭발하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저는 이려고서도 우리가 정치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총리님이나 저나 이려고서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많이 반성합니다.

○도종환 의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드러난 피해자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혹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피해자 파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유가족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인데, 다만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유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종환 의원**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의원실에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피해자 통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양수산부에 했더니 거기는 국민안전처로 물어보라고 하고 국민안전처로 질의를 했더니 해양수산부로 떠넘기고 이러면서 통계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최선을 다해서, 법률적·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특별법 시행령은 제가 지난 4월 9일 날 차관회의…… 입법예고가 4월 6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차관회의에 상정이 된다는 보고를 받고 연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또 요구가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 수정 보완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3월 12일 날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책무라면서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각 분야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김기춘 10만 달러, 홍준표 1억, 홍문종 2억, 허태열 7억, 유정복 3억 이런 것이 고질적인 부정부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사실이라면 그렇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사실이라면 부정부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사실 그러한 것이 수교가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부정부패입니다.

○**도종환 의원** 4월 4일 날 성완중 회장하고 독

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기억에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 그날 4월 4일 자체를 제가…… 등록일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록 첫날?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도종환 의원** 그날이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이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래서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고 그래서 누가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치러 본 분이면 대개 개소식 날이나 또는 등록 첫날은 법정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개소식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데 선거운동 개시일이 4월 11일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4월 4일부터 등록을 하고, 사실상의……

○**도종환 의원** 그날은 등록하는 날이고, 실제로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은 4월 11일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4월 11일은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현장에서 등록하는 날 언론 인터뷰와 함께 많은 분들이 옵니다.

○**도종환 의원** 4월 11일 날……

○**국무총리 이완구** 개소식은 제가 볼 때 3월 말쯤 개소식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도종환 의원** 4월 4일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날이고, 4월 11일이 선거운동 개시하는 날이라서 11일 날 사람들이 많이 오고 4일 날은 그냥 등록신청 정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4일과 11일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물리적으로 볼 때 사실상은 3월 말에 사무실 개소식 할 때부터 사실상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하시지요, 현실적으로 개소식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등록일 날은 언론에서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

면 등록을 한 정치인이 몇 명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분위기는 그때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선거운동이 15 일인가 아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 두 가지를 혼동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1일 날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4일 날 후보자 등록신청 하는 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총리님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낸 후원자 중에 5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가 보니까 21명이더라고요. 액수로는 1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회사원이 17명, 건설업이 1명, 자영업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원이 많은 것이 좀 눈에 띄는 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회사원 중에도 총리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부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해 봐서 알지만 기업들이 사장이나 대표 명의로 후원금을 내기 곤란할 때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후원금을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상 고액후원자는 대개 어떤 분들인지 사무실에서도 파악하고 또 당 의원한테 보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개를 끄덕임)

○**도종환 의원** 이 고액후원자 명단을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혹시?

○**국무총리 이완구** 예, 보고를 대충 받았습시다.

○**도종환 의원** 그중에서 고액후원자 중에 경남 기업 임직원이나 또 성 회장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후원하신 분은 안 계시던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런 말……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

○**도종환 의원** 만약에 경남기업과 관련된 후원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요, 저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은 곤란합니다마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과, 고인과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그전에.

○**도종환 의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경남기업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합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면 역시 수사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명단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마 저분들은 거의 충남·북, 대전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고. 회사원이 많다는 것은 아마 제 학연—대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사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충청권에서 주로 후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도종환 의원** 대통령께서 9박 10일간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도종환 의원**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 국정은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가 통할해서 책임을 집니다.

○**도종환 의원** 총리가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과 주고받은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해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도종환 의원** 대통령께서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혹시 하신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죄송합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도종환 의원**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간접적인 전언 같은 것은 혹시 받으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 올린 대로 총리직의 막중함을 저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외신에서 말입니다. 일본 중국 유럽의 언론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로 대통령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직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종환 의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대통령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렇게 챙기실 수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여당 의원 중에도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언론의 보도 봤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내에서는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종환 의원** 그냥 있을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경청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냥 경청만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부담되지는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오늘 외유를 떠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국무총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흔들림 없이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어제 JTBC 뉴스에서 전혀 4월 4일 날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던 성 회장과 충남도청 준공식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사진이 보도되는 것도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대정부질문 준비 때문에 세세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마는, 듣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도종환 의원** 하루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날 저녁 또는 그다음 날 아침에 뉴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계속 나흘째 이렇게 연속해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총리님은 지금 대정부질문의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국민들과 언론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이완구**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발언대에 서게 되면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1년, 2년, 3년 전 일을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몇 초의 상간 속에, 그 시간 속에서 몇 년 전 것을 정확하게 답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진술의 차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종환 의원** 국민들이 전혀 믿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것 제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입장을, 서 있는 곳을 달리해서 몇 년 전 것을 툭툭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것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기억력을 되살려 가지고 답변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의원** 혹시 성 회장으로 부터 명절 선물 같은 건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저는 명절 선물을 받았어야…… 2007년, 8년, 2년 동안 극한 송사를 했기 때문에 선물이 올 턱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2008년 11월에 2심에서 경남기업을 우리 충청남도가 이기고 나서 2009년 12월 달에 지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9년 12월부터는 도지사직이 아닌 무직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선물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착오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는 제가 병원에 있었고요. 2013년도 4월은 보궐 선거에서 제가 당선인 된 그런 정도입니다.

○**도종환 의원** JTBC 보도에 의하면 성 회장이, 성 진 의원이 이 총리께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세 차례 선물을 보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2009년 12월 3일 세종시 때문에 저는 도지사직을 사퇴했고 2010년, 2011년도는 미국과 일본에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날인가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로부터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2010년, 11년, 12년의 생활입니다.

○**도종환 의원** 전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2008년 11월에 저한테 그렇게 소송하고 무슨 생각에서 보냈다면, 아니면 일률적으로 쪽 실무자들이 보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2010년 제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0년, 11년 저는 미국과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는 1년 동안 투병생활했기 때문에 타인과 접촉의 기회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몸 상태가.

○**도종환 의원** 총리님은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의에 충분히 해명하고 충분히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수년 치의 기억을 되살려서 의원님들 질문에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큰 흐름 속에서 답변을 올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에서 표현의 미묘함 때문에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의원**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이 매일매일 진위 여부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고 드러나고 하는 것이 지금 4일째 계속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정말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 점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국무총리 이완구** 조금만, 죄송합니다.

지금 저도 국회의원이입니다. 저도 의원회관에 제 사무실 일정표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의원회관 제 사무실에서 비서관들이 체크한 것을 보니까 고인께서는 같은 국회의원실의 일정 중 23회가 일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의원사무실, 저희 회관도 제 일정을 짜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입니까요?

보니까 국회의원 같이 하는 것 중에서 단독으로 만난 것은 4회인데 식사는 2회이고 나머지는 충청권 의원들과 회동, 세종특별위원회 관련 회의로 만납니다.

그래서 비망록에 나온 23회 중 일치하는 것은 열한 번으로, 1년몇 개월입니까? 국회의원 같이 하는 동안에 일치하는 부분은 열한 번으로 저희 의원회관에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게 기록이 아마, 저도 의원회관에 제 스케줄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미세하게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인께서는 고인대로 기록이 있겠지만 저는 저대로 국회의원 회관에 저의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각 의원회관 간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소 이런 부분적인…… 저는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시차도 있고 또 기억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의원회관에 오늘 아침에, 오전에 한번 살펴 보라고 했습니다, 스케줄표를 봐 가지고. 그게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종환 의원** 총리께서는 아까 ‘양심에 또 신앙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심지어는 목숨까지 거론하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도종환 의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신을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국민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새로운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실망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참으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총리께서도 깊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정치를 해야 하는가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용퇴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고인께서 반기문 총장과 총리와 관련을 지우는 그런 녹취록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약할 수가 있는가, 대단한 오해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기문 총장의 대권과 또 저의 무슨 그러한 문제와 결부되어서 제가 고인을 사정했다 하는 그런 심한 오해가 저간에 깔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 부덕의 소치로 그러한 오해를 또 본인에게 갖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도종환 의원** 적어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실 정도면 진위와 관계없이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하고 그리고 용퇴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용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총리의 자리는 제 개인적 자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외유를 떠나시는 이 마당에 국무총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통할하는 각오로 국정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종환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만 1년이 되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 줄 수 없다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상처받고 슬퍼하는 이들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혼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희생자들과 우리가 뿌리가 같은 영혼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물의 연대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며, 그 역량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을 수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심,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호가 이 시대 우리나라에 던지는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 출신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 발생 1주기입니다.

승선자 가운데 실종자 9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희생됐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자살하신 교감선생님, 민간 잠수사 두 분, 구조헬기 추락으로

다섯 분이 돌아가셔서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희생자가 여덟 분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도주민들에 대한 천문학적 금액의 직간접 피해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민, 잠수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구조활동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메시지는 부정부패 비리 척결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셋째, 체감 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부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부패, 비리,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방산 비리와 원전 비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이자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따라서 사소한 비리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안전불감증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중 두 가지 주제, 즉 안전과 의료를 통한 국부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세요.

총리님, 성완중 전 의원님의 사망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매우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총리마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은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가중시키는 다소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자극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껏 나온 내용 중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원하신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실제적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서 국민적 혼란을 막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서 빨리 하루바삐 국정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정책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제2롯데월드 타워는 작년 10월 서울시가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준 이후 잦은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하였고, 수족관 누수, 출입문 떨어짐, 지하주차장 균열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 업체들도 영업손실로 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롯데에 대한 제재 의사만 밝히면서 사고가 재발하면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와 롯데 측의 상호 공방 사이에서 송파주민들은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지자체 일이지만 중앙정부로서 국민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지방과 중앙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분담하는 비용 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숙 의원 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m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전국에 초고층 건축물이 공사 중인 것까지 합해서 10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마련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 화재 사진입니다.

만약 건물의 10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초고층은.

일단 자동소화시스템이라든가 충분한 대피공간이라든가 헬기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현재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나 건물 안전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장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외부에서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건물 내에 대피공간 확보 등 고층 빌딩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소방장비 개선 등 진압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롯데월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2롯데월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88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충분한 주민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공사 착공을 강행하려 하다가 2개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교통난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서 주민의 견 수렴을 거쳐서 설계를 끝낸 다음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반으로 갈려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사전승인만 달랑 내준 서울시의 서투르고 무책임한 행정이 애꿎은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송파구의 동네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의 교통의 동맥인 88올림픽대로입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은 전부 롯데월드 건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는 송파구만의 시설이 아닙니다. 향후 수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다음 주제는 싱크홀입니다.

최근 서울 도심지를 중심으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본 의원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에는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공간 3D 통합지도 구축 사업, 지하 안전영향평가 중점관리대상 관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예산 배정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총리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싱크홀의 원인은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며,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하 하수관의 30%가 50년이 넘는 노후 하수관이고 이를 모두 교체하려면 3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다음에 가거도 헬기 추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유인도서의 의료시설과 안전시설의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많이 열악합니다. 한 430개 유인도 중에서 그런 시설이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대단히 열악합니다. 야간 등화가 있는 게 11개, 착륙장이 85개인데 그중에 11개만 야간 유도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저기 하얀 줄이, 흰 페인트로 'H'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근 추락사고가 일어난 가거도 헬기장 사진입니다. 노후된 헬기도 문제이지만 'H'자 모양의 흰 페인트만 보고 유도등도 없이 밤에 어떻게 헬기가 내릴 수 있는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난 2월에 서해해경본부에서 가거도와 흥도 착륙장에 야간 등화시설이 없어서 운항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단지 플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숙 의원 총리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세요.

가거도 공중보건의사는 7세 아이의 맹장염을 의심해서 응급헬기를 요청했지요? 헬기가 추락하자 아이는 경비정을 타고 목포 병원으로 이송되

어서 치료받고 퇴원하였습니다. 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그래서 지금 반대가 있지만 원격의료는 최소한 가장 시급한 곳, 예를 들면 산간벽지·오지 섬 군대 교정시설 등에서 서둘러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간 대상 원격의료는 지금 시범사업을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신뢰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환자 의사 간의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서 만든 의료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원격의료는 벽·오지라든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그 격·오지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원양어선이라든가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작년에 제출을 했고요,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지금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있었으면 만약에 가거도에 원격의료があれ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있었어도 발생을 했을지 그런 것은 말씀하시기 좀 어렵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면 원격의료 진단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의 사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이런 기술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박인숙 의원 그런데 그 상용화를 못 하고 있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그 원격医료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시범사업 빼놓고, 국정홍보를 위해서, 반대가 많다면 어떤 활동을 해서 이것을 설명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확산시키면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중에 저희가 원양어선에 대한 원격의료, 응급실에 대한 원격의료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국민들께 이러한 유용성을 설명드리고 홍보도 드릴 예정입니다.

○**박인숙 의원** 장관님, 제가 작년에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과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기억합니다.

○**박인숙 의원** 그래서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갔다 오셔서 보건의료 관련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잠깐 요약해 주시지요, 어떤 성과를 했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쿠웨이트 보건부나 UAE 샤르자 보건청이나 이런 다양한 MOU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간 차원에서 병원이라든가 건강검진센터들이 진출하는 기회도 만들었고 또 의료인력이 상호 교류하고 제약사들이 또 사우디로 진출하고 하는 여러 성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의 의료기구가 중동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것, 또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인숙 의원** 우리나라 의료수출이 의료 후진국보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병원 진출을 보면 UAE에 파견된 의료인력이 200명이 넘었고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도 급증해서 작년에 25만 명이 넘었고 진료비가 5500억에 달하고 여태까지의 외국인 환자 총 진료비도 2009년 이후로 2조 2000억이 됩니다.

또 비의료 분야 진출까지 하면 수조 원의 규모가 되는데, 최근 과담이 있는 것 아시지요? 대통령 중동 순방 후에 국제의료 진료비가 많이 진행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과담이 돌고 있고 지금 현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나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 이런 과담이 퍼지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박인숙 의원** 법안이 어떤 상태에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상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박인숙 의원** 그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이 비단 중동뿐 아니라 8000조에 달하는 세계 보건의료 시장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법안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5년 늦게 글로벌 보건의료사업을 지원을 시작해서, 정부에서 해서 보건의료산업이 ICT산업보다 더 시장이 커질 것을 일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작년 5월에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물론입니다.

○**박인숙 의원** 지금부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당당하게 과담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병원에 파견되면 과거 과독 간호사처럼 그렇게 고생이 될까요?

먼저 슬라이드를 봐 주시지요.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예전에 과독 간호사 분들이 언어 문제도 있었고 또 단순한 간호보조 업무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에 나가 계신 간호사분들의 경우에는 정식 간호사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또 보수도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받으시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우수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인숙 의원 차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외국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 이런 괴담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들이 당연지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체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인숙 의원 또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면 외국 보험이 들어와서 맹장수술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괴담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보험수가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함께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그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저러한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박인숙 의원 또 외국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이 우리나라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거부를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저희가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티오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내국인 환자를 구축한다거나 하는 것들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박인숙 의원 또 국제의료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저는 그 문제는 오히려 거꾸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인숙 의원 그렇지요, 의료의 질……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왜 정확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를 않는지.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장관께서 직접 방송에 나가서 국정홍보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괴담들이 사실처럼 굳어져서 있는데 보건복지부만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장관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의원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통해서 국부 창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되었으나 매번 오해로 인한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부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 앞서 말한 국제의료사업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너나 가라’라는 말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물론 IS의 위협으로 일부 위험한 지역도 있지만 UAE 등 안전한 중동국가의 의료시장에서마저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안타깝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국정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료 공공성은 우리가 확고히 하는 가운데에서 수출이라든가 해외 환자 유치 등 우리 의학계가, 의료계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숙 의원 PPT 잠깐 보여 주세요.

총리님이 예능 프로라도 나가서 정책 홍보를 해서 괴담의 확산을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세요.

어린이집 CCTV 관련 법안은 제가 두 번이나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회 대안에는 CCTV 설치 이외에도 대체교사·보조교사·보육교사 교육, 촬영으로 획득한 영상정보의 관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강화, 학부모들의 참여 확대 등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시 한 번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융성입니다.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관리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 내외부에는 1만 8000세대, 4만 7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자신의 집을 보수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풍납토성 문제 해결에는 2조 5000억이 필요합니다. 현행대로 매년 500억의 예산이 설령 매년 확보된다고 해도 보상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지금 주민의 평균 연령이 66세입니다. 그러면 105세까지 살아야 보상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사적지 지정 이후 23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주민들만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 직접 방문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이 문화재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인숙 의원** 제안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인숙 의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괴담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국부 창출과 고용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의석상에서만 정책을 논의하지 말고 괴담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정 홍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이신 최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희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합니다.

방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난 상임위 때 제가 두 가지 숙제 내 드린 거 있었어요. 그거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송계가 낙하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재단 거기 또다시 낙하산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석우 실장 계속 밀어붙이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재 공모를 마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청와대에서 이석우 실장을 민다던데요,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의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종편들이 불법·편법·탈법적 광고협찬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자료 받으시겠다고 했잖아요.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 못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MBN으로부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내리세요. 화면 내리세요.

못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의원** 지금 종편들의 불법·탈법적 광

고협찬 실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광고 바꾸기, 출연자에게 협찬받기 등등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사 B사 C사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못 구하시면 저희가 드릴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가 지금 MBN 관련해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방송법이나 또는 방송 광고 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방통위의 권위는 누가 지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통위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최민희 의원** 법무부장관 별게요.

장관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거기에 검찰에 관한 내용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요지가 뭐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제가 자료 보내 드렸는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만 봤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내용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검찰이 정치검찰이어서 외압에 굴복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헌법이 정한 수사권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진실 왜곡을 바로잡지 못했다' 이게 진실·화해위 결정입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 진실·화해위 결정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기관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내렸는데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수사 직후에 여론이나 언론이나 정당에서도 '일선에서 초기에 수사가 좀 잘못됐지만 검사들이 노력을 해서 바로잡았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별로 없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평가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그 평가들이요, 자료 다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이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 앓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도 없이 국회에서 답변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자료 없어도 제가 기억하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께서 기억 착오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억에 의존하십니까?

그다음에 오전에 유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총리 내사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요?

○**최민희 의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

○**최민희 의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느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까?

○**최민희 의원** 총리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직 조사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성완중 회장의 메모지에 나와 있는 여러 명단들과 또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특별수사팀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폭넓게 내사하는 것 중에 총리도 들어 있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의원님 잘 아시십시오 지금 총리님께서도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기제가 되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예, 내사하시는 것 인정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덧붙이셔서 달리 평가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지금 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장료를 보며)

이완구 총리님 후원금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4년 16일까지, 이게 재보선 기간이거든요. 여기에 회사원이라는 이름으로 500만 원씩 매일매일 입금이 됩니다. 이것 좀 알아봐 주시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한번 검찰에서……

○**최민희 의원** PPT 내려 주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예, 꼭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요, 총리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고생……

○**최민희 의원** 총리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무슨 뜻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최민희 의원**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에게, 총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총리님, 오늘 전 운전기사가 '4월 4일 날 성완중 전 의원하고 독대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듣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증언을 하셨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제가 선거 때 여러 분들의 참모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곤 합니다마는 운전비서도 그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정부질문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는 못합니다. 아마 4시경에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끼리 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요지는 말씀하신 운전비서와 대화를 하는 것을 아마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보고를, 이따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이분이요 '현역 의원들이 찾아오면 다 독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데 운전기사는, 의원님들 다 같이 함께 합니다마는 운전기사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케이스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민희 의원** 총리님, 잠깐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제가 운전기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 말씀은 의원님 질문에 의한다면 누가 누구를 만나고 그런 것 잘 모른다……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들이 오고갔는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비서 중에는 운전비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분들의 비서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날도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못 봤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두 분은 또 봤다는 엇갈린 진술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그 운전기사도 뭔가 총리님께 서운한 게 있었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민희 의원** 총리님, 2012년……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이 제가 4월 24일 날 보궐선거인데 3월 초에 오셔서 6월 달에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님, 2012년 1월 6일 날 출판기념회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2012년 1월 5일·6일·9일입니다.

5일에 대전인가 홍성에서 했고 대전·홍성·천안 세 군데서 5일·6일·9일 세 차례에 세 장소를 옮겨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성 전 의원 쪽에서 그 출판기념회에 500만 원을 냈다고 해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전혀 보고 못 받았습시다. 그리고 사실 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출판기념

회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록을 해 놓지 않으면 사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분이 돈을 놓고 갔는지 안 놓고 갔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함 자체, 나중에 그 목록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들은 책값이라는 것을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받기로는, 제가 지금 자세한 보고는 없었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명단에 없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 3일 동안 얼마 들어왔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 액수는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액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9년 12월에 도지사를 그만두고 2012년 1월 5일·6일·9일 때는 아무런 활동을 못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었으니까, 현직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크게…… 주로 충청권 사람들이 대부분 한 90%, 95% 이상 됐으니까 알음알음 도지사 할 때 했던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요지는 500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저는 받은 적 없고요, 기록을……

○**최민희 의원** 아, 받은 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니 기록에도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님, 제가 대정부질의 쪽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짓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기억 착오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억 착오는 아무래도 몇 년 전 치를 짚은 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답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나.

○**최민희 의원** 거짓말과 기억 착오는 차이가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거짓말은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기억 착오는 사실상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기억이 나더라도 사실 관계가 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결과적으로 제삼자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인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요.

○**최민희 의원** 그리고 총리님, 성완중 전 회장은 어느 당 의원이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 그게 좀 모호합니다. 저는 그 어른이 정당생활을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분이 선진당으로 당선된 것만 알고요.

○**최민희 의원** 잠깐만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어느 당 의원으로 최종적으로 의원 신분을 마감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우리 당, 새누리당이지요.

○**최민희 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그런데 성완중 전 의원에 대해서 성장 과정과 부의 축적 과정을 잘 안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또 성완중 의원을 ‘잘 모르고 지냈다’ 이렇게도 말하시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도대체 뭘 알고 뭘 모르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그분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는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자의 말씀 부분은 그분과 그렇게 대화를 나눈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대 국회의원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민희 의원** 여기서 잠깐.

아까 도종환 의원 질의 과정에서 만남에 대해서 의원회관에서 방금 가져왔다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은 만났고 두 번은 식사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파악한 게 2013년에 세 번,

2014년에 여섯 번, 그리고 JP와 3인 회동이 두 번 있어서 약간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따질 생각은 없고 한 번 더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그 수치를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이따가 보고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간단하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아니, 그게 틀린 것 같아서요. 제가 들었는데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저는, 성완중 전 회장이 새누리당 의원이예요. 그런데 이번 사태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게 몇 분 빼고는 성완중 의원을 잘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권에서. 이게 저한테 참 미스터리입니다.

성완중 메모에 오른 여덟 분이 처음에는 다 물론 부인하시지요. 그리고 해명들을 하세요. 잘 모르고 지냈다 어쩐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김기춘 실장께서 ‘생각해 보니까 만난 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성완중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 혼자 지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정치인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실래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화면 속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2013년 9월입니까?

○최민희 의원 누구입니까, 이 패션쇼에 참가하신 분?

○국무총리 이완구 아시면서 저한테 왜 묻습니까? 대통령 아니십니까?

○최민희 의원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이십니다.

○최민희 의원 대통령께서…… 성완중 회장이 베트남에 건물을 세웠어요, 그 랜드마크. 거기 패션쇼에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함부로 어디 안 가지잖아요. 여기 갔단 말이지요. 왜 가셨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저도 2003년…… 2012년도에 1년 동안 고생 끝에 2013년 1월 달에 몸이 좀 붓기를 빼는 데 따뜻한 곳이 좋다고 그

래서 저도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가 봤는데 그 건물을 봤습니다. 봤는데, 대단히 웅장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2013년 9월로 저기에 기재가 돼 있는데,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건물이라 하니까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고인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누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현지 나라에 가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일정도 제대로……」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일단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최민희 의원 대통령께서 성완중 회장이 베트남에 지은 랜드마크 패션쇼에 가셨다, 이게 중요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노이에……

○최민희 의원 안 가셨어요, 그러면?

○국무총리 이완구 하노이에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이 됐는데 가장 눈으로 가시적으로 뚜렷이 보이는 게 바로 오십몇 층인가 육십몇 층인가 아주 높은, 제일 높은 건물이 바로 이 경남기업이 지은 건물입니다.

○최민희 의원 잘 아시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하노이를 방문한 대통령께서 그 건물에 가신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큰 건물이라서 눈에 보인다고 그냥 방문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뭐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최민희 의원 총리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성완중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단 한 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고인은 ‘3000만 원 줬다’ 그렇지요? 그리고 고인 주변 사람들은 ‘비타500 박스 안에 넣어서 줬다’ 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완중 전……

○**국무총리 이완구** 비타500 줬다는 분도 계시고 또 누런 봉투로 줬다는 분도 계시고 진술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게 저도……

○**최민희 의원** 예, 그건 잘 아시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것 알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최민희 의원** (의장석을 돌아보며)

의장님, 저 질문해야 되는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누런 봉투라 하는 분도 계시고 비타500이라는 분도 계시고 측근들 가운데도 좀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총리께서는 의원이 질문할 때 좀 기다려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렇다면 성완중 전 의원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뭘니까? 3000만 원 줬다고 성완중 전 회장은 얘기하고 총리님은 안 받았다고 얘기해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만 저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저의 심정은, 녹취록을 보니 대단히 저한테 섭섭한 마음을 남겨 놓고 가셨습니다. 마치 무슨 대권과 관련해서 본인이 사정의 타깃이 됐다는 그런 큰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 제1호로 제가 고인을 삼았다, 그것도 청와대와 총리실의 합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섭섭함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되나 대단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조사가 되겠습니까마는 2013년 4월 전에는, 보궐선거 전에는 이 어론과 거의 만난 기억이…… 기록이 나오겠지요, 여러 가지 조사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만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성완중 전 새누리당 의원은 너무나 섭섭해서 자살하기 직전 총리님을 무고 또는 모함한 것이지요, 지금 말씀은?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 올리

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혼란스럽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총리님, 국민들은 총리님 말보다는 고인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까 23회에 관한 부분도, 의원님도 의원회관에서 일정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일정관리와 별써 차이가 나거든요. 성완중 의원께서 만들었던 비망록 일정과 또 저의 의원회관에서 만들었던 일정과 별써 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국민들이 총리님 말을 안 믿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인이 녹취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들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언론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이게 뭐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무신불립’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 내려 주시고, 고 성완중 의원과 3월 22일 날 통화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몇 분이냐 통화하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그 몇 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민희 의원** 근데요 그때 성완중 전 의원과 총리님이 심하게 다투셨다 이런 증언이 있는데 정말 다투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투었다는 것보다도요, 저에게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사가 되는 것이지 총리가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억울한 점이 있거나 또는 말씀하실 게 있으면 검찰에 가서서 상세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같은 고향 또 같은 국회의원이한테 이것 좀 도와 달라’ 그래서 ‘글썽, 제가 살피는 보겠습

니다마는 총리는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
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최민희 의원** 그래서 결국은 다투신 건 맞네
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걸 다뤘다고 보기는 좀 그
렇지요.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께서 태안군의원 두 분께 전
화한 시간이 몇 시였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침, 제가 통상 좀 일찍 기
상을 못 하고, 글썄 그 시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침에 눈뜨자마자 열 한 서너 개의 신
문을 다 스크린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눈뜨자
마자 신문을 한 열서너 종류를 다 스크린을 하는
데 그거를 보고,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났길래, 2
면에 이렇게 났어요, ‘이완구를, 이완……’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님 아까 제가 간단하게 요지
만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6시 40분경이었고요.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아
침에 전화하신 것 같고요. 열다섯 번 통화 시도
해서 서너 차례 통화했는데 혹시 그때 금전 관련
한 얘기도 두 분께 물어보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전연 그런 얘기 안 했습니
다.

○**최민희 의원** 그러셨습니까?

총리께서는 수사에 관여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제 두 개의 수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과거
에서부터 현재까지 문제 있는 거 다 밝혀자’ 이
렇게 얘기하셨고 총리님께서서는 ‘수사가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조율하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과의 대화는 말씀 올
리지 않는 게 예의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조율했다고 알아들을 수밖에 없
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만 제가 광활하고 복잡하
다는 말씀……

○**최민희 의원** 태안군의의회 두 분께 전화하셨잖
아요, 새벽에?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수사 진행되다가 궁금한 거 있으
면 새벽에 또 전화해서 물으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법무부장관한테 통상
전화 잘 안 합니다.

○**최민희 의원** 자, 구체적인 거 몇 개 여쭙 보
겠습니다.

총리님 인사청문회 때 좀 상황이 어려워졌었지
요?

○**국무총리 이완구** 어려워졌다기보다는 대단히
좀 힘들어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때 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하
고 잘 처리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거라
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대전·충남 3개 시도에 똑같은 크기, 똑
같은 내용으로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혹시 몇 개
걸렸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제가 듣기로는 수천
장의 플래카드가 4개 시도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164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답변할 때 ‘이게 혹시 완사모에서
걸었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는 그 플래카드에
있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통화하
지도 않았습시다.

○**최민희 의원** 아니요, 지난 답변 때 ‘완사모에
서 걸었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충청도에는 제가 16대 국회
의원, 도지사 할 때부터 ‘완사모’라고 하는 한 3
만 5000명 정도의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분들이 걸었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민희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그런데 완사모인데 플래카드 안
에 이름이 완사모가 아니에요. 소상공자영업자협
의회, 충청사모회 등등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
니까 함부로 답변을 안 하셔야 될 것 같다, 충고
드리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은 새겨들으셔야 되
는데 완사모 회원 중에는 자영업자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렇다고 하
는 말씀입니다.

○**최민희 의원** 아니,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데요.

그리고 완사모가 2013년 송년회를 온양호텔에
서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온양에서 제일 큰 호텔

입니다.

○**최민희 의원** 온양호텔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민희 의원** 온양호텔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성완중 회장입니다.

○**최민희 의원** 거기까지 듣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대선 때 아픈데도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더라고요. 그러셨죠?

○**국무총리 이완구** 예, 12월 달 들어서서 사진에 보다시피 얼굴이 대단히 부어 있는 상태지만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얼굴이 부어 있건 안 부어 있건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열심히는 뭐, 세 번 정도 갔는데 그게 열심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해서 갔지요.

○**최민희 의원** 예, 그래서 선거운동 하신 거고요, 선거운동 하시면 하신 것이지 뭘 그것을 선거에 관여했다, 안 했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청문회 때 얘기 한번 여쭙 볼게요.

총리와 언론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와 언론이 특별한 언론 관계가 있겠습니까? 공직자와 언론은 일반론적인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최민희 의원** 일반적인 관계는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공직자는 나름대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고 그것을 언론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전달하는 방식은 어때야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전달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언론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최민희 의원** 그러면 ‘어이 이 국장, 개 안 돼. 해, 안 해?’ ‘김 부장, 개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언론인들 내가 총장도 만들어 주고……’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 이거요, 이거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어디 한번 당해 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리겠어’ ‘야, 우선 저 패널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이것 적절한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날은 제가 얼굴과 이름을 잘 모르는 젊은 기자분들한테 반어법적으로 또는

농담 삼아서 한 얘가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무려면 저도 정치 20년 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은 안 드렸을 겁니다. 다만 그날 종편을 보고 사실에 기초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게 웃어 가면서 한 것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분의 젊은 기자분들이 있었는데 세 분은 그날 분위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보도가 안 됐고 한 분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반어법 등, 제가 그저……

○**최민희 의원** 반어법 등, 뭘 반어 하신 건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친구가, 예컨대 친구가 있어서 그런 의미로, 예컨대 김영란법 같은 것도……

여기에 저와 그 당시 함께 고생을 하셨던 우윤근 대표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지난 2월 달에 김영란법이 양당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최민희 의원** 그게 반어법적이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때는 반대했는데, 이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님, 이때도 그러셨어요. 처음에 ‘김영란법 관련 언론 압박한 적 있냐?’ 물었더니 ‘그런 사실 없다’, 공개하라고 하시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을 바꿉니다. ‘어렵듯이 기억난다’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지금 계속 ‘거짓말한 적은 없는데 기억 착오가 있을 뿐이다’ 총리님은 일관되게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이려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법무부장관님 잠깐 빌게요.

경남기업 수사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다고 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작년 말부터 기업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 내사를 검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자원외교라든지 또 방산 비리 등에 관한 검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검토 끝에 경남기업의 비리 단서가 포착이 돼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첩보와 내사를 통해 수사 시작

했다'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 첩보와 내사를 통해서 수사한다, 이게 기획·표적 수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지수사는 첩보들을 통해서 그것을 단초로 해서 또는 언론보도나 우리 정보활동에 의해서 수사 단서를 포착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내사를 펼쳐 가는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 자원비리는 정말 많은 게 드러나 있는데 왜 하필 성공불 용자 전체 2조 4000억 원 중에 347억 1.45%밖에 안 되는 경남기업에 내사와 첩보활동을 벌이신 이유가 뭐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내사를 벌인 것이 아니고 자원개발 비리 전반에 대해서, 물론 자원개발 중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비리의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해서 저희들이 내사한 결과 비리 혐의가 포착이 돼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규모의 크거나 누가 했느냐 이런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사한 결과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된 기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 그것을 그렇게 힘주어 말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무일 검사가 2002년 대선자금 수사팀이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이분도 수사 잘하면 윤석열팀처럼 징계 보복당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천만의 말씀이고 수사를 잘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은 검찰 안에서, 법무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검사에 대한 평가는 수사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이완구 총리가 수사내용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이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맹세하십시오, 보고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 엉망진창입니다. 과연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 역량이 있나 국민들은 의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정부질의 내내 이완구 총리의 양심 불량, 후안무치, 거짓말 퍼레이드를 목도했습니다. 그저 믿는 것은 방송 장악과 중복몰이뿐인 듯합니다. 그러나 언론계마저도 해도해도 너무 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든 비극적 적폐의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제발 남탓, 물귀신작전 마십시오. 쳐부수어야 될 암덩어리 원수는 대통령 최측근 비리입니다. 그것부터 개작두로 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문재인 대표와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예쁘게 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최민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영동 와인, 보은 대추, 옥천 묘목의 고장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304명의 꽃다운 학생들과 선량한 시민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가의 안전대책 방안은 유명무실했고 담당 관계자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비췄던 어두운 거울이자 비통의 눈물이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직도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러

나 국민안전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당초 국민안전처는 유능한 민간 전문가와 공직 내부의 재난전문가 영입을 하신다고 했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 몇 %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20% 한다고 그랬습니다.

○박덕흠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맨 처음에, 총 103명이 과장급 이상인데 원래 개방형을 하는 것은 목표가, 목적이 민간전문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특수재난실의 요원들이, 우리나라의 인재풀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30명 중 20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다 충원되고 5명이 남았습니다. 그 5명도 현재 마지막 단계인 신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이면 다 충원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의원 그런데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크고 작은 특수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재난실장이 공식이 맞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인력 충원도 안 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직위 충원을 위한 향후 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우리나라 속담처럼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특수재난실은 이번에 처음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인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장기화됐는데 지금 현재 특수재난실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4명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검증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달 말까지는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 이번 말까지는 된다는 얘기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아까 도종환 의원 질문 시에 성완중 전 회장님과 만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덕흠 의원 도종환 의원님 질문 시에 성완중 전 회장님과 만난 일의 일정, 만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회관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성완중 의원 비망록과 저의 의원회관 일정을 확인해 보니 23회 중 일치하는 것은 11번입니다, 1년 몇 개월 동안에요. 그중 성완중 전 의원을 단독으로 만난 일정은 식사 2회를 포함해서 4회, 나머지는 충청권 의원들과 회동 및 세종특별위원회 관련 회의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성완중 의원 비망록에 나타난 나머지 12회의 만남은 이완구 의원실과 원내대표실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말씀 올린 겁니다.

○박덕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하늘은 안 무너져도 땅은 꺼진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요즘 싱크홀이 빈번하게 나타남으로써 아마 국민들이 불안해하신 그 표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주변에서 잇따라 싱크홀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완구 그래서 일전에 제가 지하철 9호선에 가서 보고를 받은 바로는 노후된 상하수도 또 굴착공사 불량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덕흠 의원 전국에 하수관로가 총 12만 6591km가 있는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이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3만 7564km 중 1637km만 샘플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1582곳에서 하수관 파손, 토사 유입 등으로 인해

서 싱크홀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1km당 한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에 점검한 구간은 20년 넘은 노후 하수관 전체의 4.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노후 하수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우선 20년 이상 된 것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조사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 이후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서 보수예산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노후되고 결함이 많은 하수관부터 시범적으로 국가가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동안에도 싱크홀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하수관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비의 부담을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리님, 또 싱크홀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공법 중 하나인 쉘드공법입니다.

지난해 서울 석촌지하차도 입구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지하차도 아래서 발견된 6개 빈 공간에 대한 원인을 아까 총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셨듯이 쉘드공법이란 50여 개 다이아몬드 날이 장착돼서 분당 한 1~2바퀴가 회전하면서 땅을 굴착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굴착 과정에서 빗물이나 지하수에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 사이를 메워주는 그라우팅 작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쉘드공법이 아니라 지반 유지를 위한 그라우팅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사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총리님이 앞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공사 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설공법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그라우팅 작업이 당초의 설계대로 잘 되었는지 감사원 감사나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 고생했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최근 불거진 성완중 리스트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검찰 내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특별수사팀 구성 간부들이, 검사들이 철저히 사건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입수하고 있고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물론 검찰의 수사를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특별검사제도는 어떤 경우에 실시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특별검사제도는 현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특검을 요청해서 의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법무부장관도 이해 충돌 등의 우려가 있을 때 특검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본 의원은 이번 경우야말로 특별검사제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장관님, 그러면 특별사면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게 2008년도에 사면법이 개정이 돼서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2008년도 이전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공포·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덕흠 의원 그러면 특별사면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님이라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덕흠 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완중 전 회장은 2004년 7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른 피고인 1명과 달리 3일 만에 항소를 취하합니다. 또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7년 11월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다시 다른 3명의 피고인들과 다르게 홀로 상고를 포기해서 형을 확정받고 한 달 만인 2008년 1월 연이어 두 번째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검찰 역시 두 번의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다르게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성완중 전 회장은 현 정권 아래에서 두 번의 파격적인 사면을 받는데 두 번 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항소를 하지 않고 형을 빨리 확정을 받아서 속전속결식 사면을 받았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말입니다.

이 사면의 내용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현 정권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되고요. 현 정부에서는 저런 유의 걱정을 끼칠 사면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 이러한 성 전 회장의 신속하고 의심스러운 특별사면 과정 때문에 연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법무부에서 주도했다 또는 자민련 측과 이명박 당선인 측의 요구가 반영

된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련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극구 부인하는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어제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을 받을 때 법무부는 성 회장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는 게 확인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방송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방송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고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박덕흠 의원 장관님, 만약에 성 전 회장이 사면에 대한 그런 확약을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면 그 시기는 분명히 상고 마감일인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확약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 장관님,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 당선되셨는가는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2007년 12월 19일입니다.

화면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한참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2007년 11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 대통령당선인이 아닌 대통령후보자가 사면을 요구하고 참여정부가 받아 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 법무부에서 하는 절차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차이가 있지요?

또한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로에서 있던 그 기간에 성완중 전 회장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적어도 당선 전인 이명박 후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조사하면 다 되지요, 국정조사해요!」 하는 의원 있음)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에 정치권을 디딤돌로 사세가 크게 확장되어 경남기업을 인수하고 또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경복합체였다는 말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고인의 불행한 죽음으로 인해서 밝혀진 것은 없고 의혹만이 쌓여 갑니다. 검찰이 하루빨리 성역 없이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진실을 규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성역 없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대청호 규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충청도에 자리잡은 대청호가 지난 35년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특히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입지가 제한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박덕흠 의원** 그래서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건축물 입지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피해 추정 금액 혹시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최근에 저희들이 추산한 바가 없어 가지고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덕흠 의원** 35년간 약 4조 20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소와 농업소득 감소, 고용 감소 또 교통 피해, 어업 피해까지 합치면 아마 8조 90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일부에서 그런 연구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35년간 지역주민들이 감내해 왔던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청호는 충남부, 대전 이쪽에 하루에 110만t 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류에 여러 시·군이 있고 또 인구가 있고 축산시설 등이 있어서 연중 한 오륙십 일씩 조류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을 상수원으로서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일정 정도 오염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덕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대청호 지역주민들의 억울함 또 팔당호하고 대청호하고 규제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더욱 극명해집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팔당호의 수도권 상수원의 경우에는 건축물, 음식·숙박업이 법 제정 당시에 '총량제 시행 시 입지 가능'이라는 단서조항으로서 자유로운 반면에 대청호의 경우에는 저렇게 틀립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강 특별법이 98년도에 입안되어 가지고 99년 초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낙동강·금강·영산강 3개 법은 2001년 말에 동시에 통과가 됐는데 이 나머지 3개 법은 규정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1999년도에 통과될 때 총량제를 임의제로 했고, 나머지 3대 강은 2001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의무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시차 때문에 서로 다르게 됐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한강하고 금강에서 대청호와 팔당호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한강도 의무제가 됐고 금강도 의무제가 됐기 때문에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꼭 그렇게 맞추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미 정부 발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심사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저도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침체로 고통의 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대미문의 성완중 리스트 파장이 정치권을 초토화하고 국정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정 핵심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경제활성화 문제 등의 주요 국정과제들을 뒤로 한 채 오늘 마지막까지 이완구 국무총리의 청문회로 변질시키고 그 본연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형국입니다.

야당은 리스트에 거명된 8명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야당 또한 경남기업의 성장 과정과 미심쩍기 짝이 없는 두 번에 걸친 특별사면에 관계된 핵심 인사 등에 관해서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치권이 산적한 현안을 무시하고 정쟁만 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삼류정치라는 비아냥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정 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박덕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합니다. 희생자·실종자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 성완중 회장의 메모로부터 촉발된 비리 게이트는 국민들의 눈에 현 정권의 실상을 속속들이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집권 여당은 도로 차떼기 당이라는 불명예를 되찾았고, 메모에 연루된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비리 게이트의 주범, 정치 불신의 주역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집권 여당에서조차 정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을 보면 더

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고인께서는 메모에는 이름뿐이었던 국무총리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했노라고 육성 증언까지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이 비리 게이트에서 이 이상의 무슨 정황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사흘 내내 총리께서는 돈 받은 증거가 나타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단순한 부인을 넘어 섬뜩한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이 나라의 총리된 분의 답변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귀를 의심할 만한 강변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지역구를 가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메모가 지닌 진실 저 반대편의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상황에서 듣기 거북한 항변마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총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국민의 공복이고자 자임했던 이 나라의 국무총리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지금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든 불신, 모든 돌팔매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 상징적 위치의 맨 앞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항변을 통해서 혐의 없음을 주장하셔도 국민은 결코 총리의 강변을 무혐의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총리의 강변이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법적 절차가 이행되고 그 결과가 설사 무혐의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속 법정에서 총리 이완구는 여전히 유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보다 더 무서운 민의요, 민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가 택하실 길은 어떤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위기, 정권의 몰락은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정권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만드는 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이고, 총리가 그토록 뒤돌아보게 만드는 유권자, 나아가 국민에 대한 아픈 배신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도지사 시절 본인의 소신과 지역주민의 여망을 안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당시 정권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인간 이완구’의 목숨을 내걸지 않고 결연히 ‘도지사 이완구’라는 정치적 목숨을 책임감과 바꿈으로써 뒷날 화려하게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연인의 총리가 아니라, 자연인의 목숨이 아니라 정치인의, 총리로서의 목숨을 던지는 책임 있는 결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어제 총리가 계실 곳은 이곳 의사당이 아니라 서초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총리께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과 함께 국민안전처 다녀오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의원 왜 가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또 본인은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점검과 사후에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진후 의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 기억하시지요? 꼭 1년 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소회한 말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로서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고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하고 학생이 가는 곳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각오입니다.

○정진후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께서 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하셨던 약속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의원 무엇이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진상조사 그리고 또 철저한 실종자에 대한 귀환 그리고 또 보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정진후 의원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의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특별법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의원 그런데 저기 사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지난 4월 4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조차 싹둑싹둑 잘라 버린 가족들이 자식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울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인양 문제하고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의 조사기구의 독립성·독자성 이런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예고했던 이 특별법 시행령, 그러면 이게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주무관서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4월 6일인가 입법예고 기간이 마쳐졌으니까 일단 정부로서는 그 사이에 나왔던 모든 비판과 또 건의를 모아서 철저하게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의원 보시겠습니다.

특별법 1조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독립적 활동을 통한 진상 규명은 물론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이다, 이것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이고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압니다.

○정진후 의원 국민들의 생각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 시행령안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폐기하고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시행령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은 주무관서가 해수부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입법에

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지나친 시간의 지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근본적인 검토도 마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의원 가족들이 1년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수정·보완이 정부 입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폐기하고 재입법 예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예, 잠깐만 들어가 계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님이 오셨습니까?

○부의장 정갑윤 정부 측에서, 장관님들께서는 파워포인트를 저쪽을 보지 마시고 거기 앞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니까 저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의원 차관이십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정진후 의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근무 중 순직하신 분들, 그 순직처리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공직자 순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까? 그래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제가 그것은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아니, 이게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 아닙니까, 순직처리가?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순직처리가 지금은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인사혁신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입니다.

○정진후 의원 국무총리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정진후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이 기간제교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정진후 의원 이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기간제교사는 계약에

의해서 임용을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근로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부처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다시 사회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중에 기간제교사 두 분 아시지요?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의원 이분들 순직처리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부로서는 안타깝지만 안 됐습니다.

○정진후 의원 왜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교원,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처우에 대한 조항에 따라서 지금 인사처의 의견이 순직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의원 법률가 출신이지 않아요?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먼저입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정진후 의원 공무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진후 의원 2012년 6월 1일 날 기간제교사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2심, 7민사부입니다.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

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확인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의원 그래서 이분들 그대로 성과급 지급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의원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답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관련 판결문과 관련 내용들입니다.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유족과 당사자에게 함에 있어 그 비용의 지급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자꾸 이분들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십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아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될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이 기간제선생님들 세월호에 간혀서 이렇게 돌아가셨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진후 의원님의 그 논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또 부총리로서 수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왔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주무 관처의 해석이 대상이 안 된다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의사자 인정을 받는 절차를, 교육부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자 처리로써 부족하나마 처우와 예우를 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무원연금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연금법의 어느 조항에도 ‘기간제교사는 순직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수없이 조항들을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금지조항은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석해 온 처우에 관한 해석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인사처가 해 왔는데 존경하는 정진후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의원 순직처리에 관련된 법적 규정이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여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축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관행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참사가요? ‘관행’, ‘관행’ 하다가……

그리고 그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가 이분들의 순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인하는 제가 이렇게 답답했을 때 가족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기간제교사들 몇 분이냐 계십니까? 이분들이 학생 지도하실 때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야 될 티오 안에서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정식 대신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정식 교원의 티오에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분도 공무원이고 그 근무 행태도 공무원이고 내용도 이러면 마땅히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말씀하신 견해 그거를 주무 관서에 다시 한 번 저도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잠깐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정진후 의원 장관님, 제가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2년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비정규직 보호지침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발표했습니다.

○정진후 의원 거기서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맞습니다.

○정진후 의원 그리고 작년엔 그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가 42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조사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정진후 의원** 제가 보니까 28.9%에 달하는 124개 기관이 아직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정진후 의원** 이에 대한 대책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금년에도 저희들이 전체 47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한번 실태점검을 하고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후 의원**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이런 정부의 약속이 먼저 공공기관에서 지켜지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나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공공기관 교육을 할 때에도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특히 시중노임단가가 제조업 생산직 단순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노임단가가 좀 세분화되지 못해서 금년에는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청소·경비 이렇게 구체적…… 그 노임단가 산정도 좀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시 사회부총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가 조사했던 60개 국공립대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한 학교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정진후 의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육부의 자세입니다.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때에는 여러 가지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교육부가 각 국공립대학에 작년 4월경쯤 시달을 하고 권고를 했는데 그 후에 아직 갱신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은 앞으로 갱신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다시 한 번 시달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올해는 예규로 된 것 이거 다 이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기존에 이미 계약한 부분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갱신할 때 그 점을 유념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아니, 이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규니까 예규를 지키는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나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 당국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진후 의원** 아니, 이제까지 교육부의 자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이것은 어렵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요. 그다음에 ‘미적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고용노동부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로 무슨 개선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두 번째의 답변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기관의 하나인 국공립대학은 지금 고용노동부가 만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공립대학이 계약할 때, 물론 그 계약하는 용역업체에 첫 번째 계약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후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지난 3월 24일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소속 A-320 항공기가 프랑스 알프스 산악에 추락했습니다.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고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사고도 사고지만 제가 놀란 이유는 정작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25분 만에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자기 나라 땅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 비행기의 추락 소식을 접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또한 신속하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전 7

시간의 공백 뒤에 나타난 우리의 대통령과는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로부터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가족들은 가슴 오그라드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실의 인양 또한 시행령이라는 암초에 걸려 침몰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은 비탄 속에 빠진 국민들을 뒤로 한 채 외국 순방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식물 총리라고 합니다.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미 출국해 버리고 없습니다. 사회부총리 또한 대통령 순방 기간 중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것도 국가냐고 참사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정부를 향해 돌팔매처럼 날아왔던 규탄의 외침을 오늘 다시 듣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정진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병 출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경기 용인·수지 국회의원 한선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1년이 됐습니다. 희생자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처장관 나오십시오.

평창히 안전하게 걸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원래 오늘 질의는 예정에 없었습니다마는, 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한선교 의원** 제가 한 두어 시간 전에 모바일에 뜬 기사를 보고 좀 여쭙 것이 있어 가지고요.

오늘 국민안전대회 하셨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전의 날을 4월 16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오늘 대회의 큰 의미는 무엇입니

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조금 아까 말씀드렸……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한선교 의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초청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됐습니다.

○**한선교 의원** 한 여섯 분 정도 초청되신 걸로 제가 여기……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원래 저희들은 안산하고 다 했는데……

○**한선교 의원** 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안산하고 그다음에 인천 일반인 유가족들 다 요청을 했는데 인천에 계신 일반인 가족 7명만 참가하셨습니다.

○**한선교 의원** 오늘 그 안전대회는 국가의 안전이 대회의 커다란 목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분명히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었겠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프로그램 중에 추모행사가 있었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추모행사보다도 그 경과보고에 오늘 가진 다짐대회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제 생각에는 이 행사가 지난 뒤에 끝난 뒤에 드리는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세월호 유가족도 있고 그분들을, 또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경과보고에서만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큰 뜻은 추모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오늘 그 행사 사회는 누가 봤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어떤 전문 아나운서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전문 아나운서가 봤으면 아마 안전처에서 대본이라 할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줬겠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당연합니다.

○**한선교 의원**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장관 오

시기 전에 예행연습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사회자는 장관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달라고……

웁습니까, 웁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오늘 들어가면서 사회자의 그런 멘트가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사전에 좀 챙기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런 점은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불찰입니다.

또한 장관님께서 식장에 들어서니까, 오늘 악대는 어디서 온 악대입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군악대, 국방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한선교 의원** 국방부 군악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장관이 딱 들어서니까 여기 기사 내용으로는 그들이 광파르를 울렸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그것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한선교 의원** 왜 그걸 기억 못 하시지요? 여기 30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연주를 했대요.

오늘은 국민의 안전대회지만 그 안에는 세월호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걸 내가 사진에 어떻게 다 체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후에도 이것은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잘못된 것으로……

○**한선교 의원** 앱을 개발하셨나 본데 끝나고 나서는, 7살 된 어린아이와 기념촬영을 하셨대요. 이것은 그 아이가 장관님과 촬영하는 게 영광스러워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이것도 적절합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전신문고

는……

○**한선교 의원** 뭐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안전신문고,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한선교 의원** 적절해요, 안 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아, 그래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한선교 의원** 이유 말씀하지 마세요.

저와 생각이 참 많이 다르시네요. 그냥 그러한 것들이 다 생략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안전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문고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으세요. 예?

하실 말씀 있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하세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안전신문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민들이 사시는……

○**한선교 의원** 저는 사진촬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진을 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선교 의원**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행사 뒤에 번쩍번쩍 사진 찍고 이게 아니고 안전처에서 따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오늘 행사는 안전처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선교 의원** 아, 나보고 간섭 말라고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한선교 의원** 저보고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니요, 말씀은 듣는데……

○**한선교 의원** 광파르 울리는 것 맞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아까 제가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선교 의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시다.

○**한선교 의원** 굉장히 지금, 역시 군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그것하고는 관계없습시다.

○**한선교 의원** 그걸 내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국회에 와서 대정부질문에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의원님, 저는 고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한선교 의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어지네요, 지금.

오늘 행사, 다시 돌아가셔서 무엇이 잘됐고 잘못됐고 이것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들어가세요.

총리, 한 번만 나오시지요.

그냥 오늘, 연 4일 동안 거의 그 자리에 서서 갖고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기자가 쓴 책 제목이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예요, 제목이.

○**국무총리 이완구** 운동부입니다……

○**한선교 의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냥 머리 좀 식혀드리려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운동부가 무슨 운동부가……

○**한선교 의원** 무슨 운동부든 상관없습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저것 막 피곤하신데.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선교 의원**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아마 뭐를 서술하라. 그냥 백지만 준 거지요, 답안지만. 그랬더니 거기에 이름 쓰고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 예.

○**한선교 의원** 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교육부총리 또 문체부장관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는 체육특기자를 대학 특별전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고쳐야 될 때가 됐다.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하고 대학도 못 가

고 프로팀도 못 가면 그 아이는 뭘 합니까?

이런 점을 제가 장관님들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얹어서 갖고 진지하게 좀 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운동부 학생이라 해서 학업이 소홀히 되는 점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경기 향상을 위해서도 일정한 교과과정은 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들어가시지요.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지요.

오늘 못 뵈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됐네요.

우리 부총리와는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대학 체육특기자 문제 이것을 의논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고 또 부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형적인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체육특기자제도 또 병역특례제도 또 체육연금제도…… 뭐 연금이야 그들이 젊은 시절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국위를 선양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건 모르겠는데, 또 병역특례 이것은 부총리께도 좀 연관이 있나요, 사회 분야 이쪽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그 부분은……

○**한선교 의원** 그것은 없고. 그러면 체육특기자제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 이것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한번 소감 좀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엘리트 체육, 특히 국위 선양을 위한 집중적인 훈련·합숙 그리고 그야말로 특례의 좁은 길을 걷도록 한 그 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가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 번,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 늘 주장하듯이 모든 학생은 학생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분야에서 미흡하고 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하는 입시생이 있다, 고등학교. 그들은 예전처럼 그 대학입시 할 때 전 과목을 다 적용받지는 않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요.

○한선교 의원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뭐 그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지금 체육특기자들도 사실은 그렇다면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이 정도의 최저 점수까지를 따야지 대학입시를 응시할 수 있다, 체육특기자로.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번에 중요한 세미나도하시고 또 의견을 많이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사계의 권위자들과 함께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는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교육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는 사교육비 절감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역대 정부가 다 노력을 했는데, 조금씩 총액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 어떤 노력에 의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어서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크게 봐서는 지금 방과 후 여러 가지 수업을 다양화하고 하는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초기에는 EBS, 수능에 연계하는 부분이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의 길, 멀고 또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혁신 그리고 입시체도의 근본적인 안착 이런 부분이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 공교육의 정상화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말이지요, 초등학교 과목별 총 사교육비를 보니까 예체능 빼고요, 총액이 약 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영어, 영어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교육을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시키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4학년부터 하나요?

하여튼 그 정도에 시키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잣집 아이들

은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12월 달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시라고 해 갖고 뮤지컬을 합니다, 뮤지컬, 영어로. '이 정도 배웠습니다'……

그 아이들, 저 어디 부자 동네 사는 아이들은 엄마랑 레스토랑에 있으면 엄마들은 이쪽에서 한국말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영어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실력이 어렸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커 가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직장에 시험 보고 이럴 때 꼭 보는 게 뭐예요? 영어 실력 아닙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제는 이 영어교육을 우리가, 우리가 국어도 배우기 전에 이미……

그런데 있는 집 아이들은 다 배우고 들어가요. 고등학생보다 더 잘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너무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또 우려도 있어요.

○한선교 의원 그런데 사교육에서 다 이미 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러나 공교육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전에는 언어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학부형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공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은 무리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 말씀이 맞아요. 저도 영어 일찍 배우는 것 싫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뭐, 유치원에서 가르쳐 준다 그래 갖고 배우고 들어갔어요. 이미 현실은 우리 교육 격차가 나중에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직업 선택의 이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가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정책만 좀 수정을 해서,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 정도의 수업이라도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 유치원 다 하고 있어요, 돈 좀 많이 내는 유치원은.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육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기에 실시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현실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들어가시지요.

문체부장관님!

이웃집 사는, 진짜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요즘은 학원, 그전에는 가기 싫어하던 그런 표정에서 학원을 참 열심히 다닌답니다. 이유는 9시부터 농구교실을 보내 주니까. 그 전에 빨리빨리 숙제 다 하고 그래야지 보내 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농구를 하고 싶어 갖고 훨씬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훨씬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의 가정에서는 ‘농구 할 시간이 어디 있니? 수학이라도 하나 더 배워야지’ 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학교 체육은 교육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국민 체육은 우리 문체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런 국민생활 저변 확대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클럽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클럽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여러 가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위해서 또 학교의 지역 스포츠클럽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초·중·고등학교 축구 주말리그, 주말에 경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갖고 연말에 우승팀들 모여 갖고 거기서 챔피언을 가리고 이런 것을 여러 단체종목으로 좀 확대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선교 의원** 그런데 단체종목이 어느 연맹…… 연맹들은 대회를 가지려 해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지자체에서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한 7000만 원, 많게는 1억.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와서 쓰고 거기서 숙박하고 그렇게 성공한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잘 운영하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주말리그를 통해서, 저

는 체육이 갖는 가치 중에 커다란 것은 가족의 화목, 화합, 행복…… 주말리그는 왜 좋은가? 아 빠가 주말에 아이의 경기를 가서 보고, 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밤에 야구장 가서? 그런 쪽으로 저는 이제는 좀 확대해 가야 되고.

아까도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전부터 죽 해 왔는데 엘리트 스포츠가 가치가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그쪽으로 우리 문체부에서 좀 많이 나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특히 올해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예산을 굉장히 증액을 하고 모 중앙 일간지에는 기사가, 기획기사가 매일 같이 나오고, 기획기사가 나오고 옆에 또 문체부 관련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좋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담당 차관의 학력이라든지 이런 홍보내용이 들어간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흠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리고 특성화대학 스포츠산업에 관해서 대학 운영계획에 보면 5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또 특정 대학이 거기 1등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과 저는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다 아실까 봐 그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한 번만 더 나오시지요.

체육특기자 전형, 먼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체육대학이다 그러면 그 한국체육대학 특성이 개인종목이라든지 좀 낙후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체육인재들을 선발해서 4년 동안 잘 키워서 실제로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나가서 한국체육대학이 따 오던 메달 수는 사실 엄청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아쉬운 것은 사전 스카우트를 한

다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거의 1 대 1 아십니까? 지원자와, 그러니까 모집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학은 축구부 엔트리가 한 20명이라고 하면 68명 아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전체 체육특기자로 들어온 학생 중에 졸업하기 전에 그 운동을 그만두는 애들이 거의 20%입니다. 그건 뭐예요?

소위 실력이 안 되는데, 한체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체대는 좋은 학생들을 뽑아요, 능력 있는. 하지만 거기도 이제는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오픈된 가운데서 선수를 선발해야지 비리도 없고…… 학부모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농구 축구 배구 뭐 이런 것을, 단체종목은 끼워 넣기라는 게, 들어 보셨잖아요, 이전에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재는 실력이 안 되는데, 재는 거의 출전도 못 했는데…… 하지만 쉬쉬하면서 지나가지요, 내 아이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런 점들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번에 한체대 총장께서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한선교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오늘 우리 방청석에 어린 학생들이 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저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것은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다, 나도 열심히 하면 누구와 똑같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가치이고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만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입학,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근절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한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입니다.

행자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얼마였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정확한 숫자는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2조 5000억, 하루에 70억 정도 나가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왜 자꾸 하루에 80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그것은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다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최동익 의원 아니, 이것 정부가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얘기하고 정부가 하는 얘기인데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정부의 자료는,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의 주무 부처가 아니라서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주무 부처가 어디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인사혁신처입니다.

○최동익 의원 인사혁신처 처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지요?

저는 행자부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관련해 가지고 빌려 쓰고 안 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현가로?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24조 796억 원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같은 것을 여기서 빼서 썼고요. 군복무 기간 소급 부담하는 것도 내지를 았았고요. 그다음에 IMF 때 대량 퇴직사태 때 그 임금 지불한 것, 군복무 근무기간 계산해 주던 것, 이것 다 안 해 가지고 결국 정부가 공무원연금 여기에 내야 될 돈 안 낸 돈이 24조 796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개 공무원을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퇴직금은 자기 월금액의 12분의 1씩 적립하는 건 아세요, 일반 직장에서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정부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퇴직적립금을 그냥 그때그때 세금을 거둬서 주더라고요. 정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퇴직적립금을 정부가 적립하지 않아 가지고 내야 될 돈이 23조 5000억입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요 일반 국민들은 직장에 근무를 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요 한 달 치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치 월급의 6.5%에서 최대 39%, 무조건 1년 근무하면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한 달 치 월급의 6.9%, 최대 39%밖에 안 돼요. 평균 이것을 25%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10년 치만 계산을 하더라도 정부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돈이 94조예요.

그러면 아까 빼 간 돈, 24조 원이 넘는 돈 그 다음에 이 94조 원을 합치면 정부가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에다가 줘야 될 돈이 118조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6.9%예요. 그러면 이 돈만 줘어도 1년에 한 8조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자,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 그러지요? 개혁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잘못돼서 고치는 거지요? 맞나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자,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혁을 하지요?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 개혁을 하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제가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익 의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공무원연금 개혁의, 지금 시점의 개혁의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연금이 지속이 돼서 결국은 미래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게 아니지요. 118조 원이라는 정부가 낼 돈을 안 내다 보니까, 낼 돈을 안 내고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연금을 깎아서라도 이 돈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국가가 앞으로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없으니 공무원들 좀 양해를 해 달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 달라’ 공무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부

탁을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슨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해 가지고 ‘하루에 100억씩 까먹는다. 나라가 망한다’ 왜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몰고 가나요?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다면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놈으로 몰고 가세요? 정부가 안 낸 돈 때문에 발생한 이런 재정 문제를, 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놈으로 몰고 가나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서 발표를 하고 착수를 하면서 그동안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헌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간다고 할 때 이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최동익 의원 다 동의하고요, 그동안 정부가 안 낸 돈 미안하다 사과하시고 공무원들 세금 도둑놈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시지요,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아직은 출발을 안 하셨을 겁니다.

○최동익 의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곧 출발하시면 직무대행 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뭐 직무대행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대통령은 현지에서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익 의원 본인의 뜻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 사퇴하실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 말씀입니까?

○최동익 의원 본인의 뜻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 사퇴하실 수 있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아니, 누가 사퇴하라고 그러면 사퇴하실 것이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사퇴를 하라고요?

○**최동익 의원** 예, 누가 사퇴하라고 그러면 사퇴하실 것이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대통령께서 사퇴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아니면 국민이 사퇴하라고 그러면 사퇴하시겠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가정을 전제로 제가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익 의원** 어쨌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익 의원** 어쨌든 문창극 총리후보처럼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지난 4월 1일 날 ‘복지예산 3조 감액시켜라’라는 걸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어떻게 감액시킬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제가 지자체장을 한 경험칙과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경험칙과 또 총리를 한 경험칙으로 놓고 볼 때는 부정수급이라든가 유사·중복 정비라든가 또는 지자체가 너무 방만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인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세출 부분에서 줄구조조정을 하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 목표 설정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동익 의원** 복지재정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마다 감축시켜 왔고 부정수급 찾아냈는데, 다 정보화하고 전산화하고 1년에 4800억밖에 못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3조 하실 생각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별로……

○**최동익 의원** 아니, 본인도 못 하시는 것을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더러, 4800억밖에 못 하는 것을 3조 해라…… 본인도 못 하는 것을 시키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중앙정부 각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최동익 의원** 여태까지 4800억입니다, 1년 평균 다 한 게.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요.

○**최동익 의원** 자료 달라는데 자료 안 주더라고요, 내역이 뭔지.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총리, 정말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4800억밖에 안 되니까 기획재정부가 4월 7일 날 무슨 지침 내렸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4월 7일 날이요?

○**최동익 의원** 예, 기획재정부가 무슨 지침 내렸는지 아세요, 2016년 예산 관련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부처별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 준 보조사업 한 10% 정도 절감을 한번……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요. 480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3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동익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초와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겁니다.

○**최동익 의원** 다시 여쭙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2015년 영유아 보육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2015년도 영유아 보육 예산.

○**국무총리 이완구** 10조 안팎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3조 493억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영유아 보육 전체 사업이 10조……

○**최동익 의원** 보육료 예산은 3조 493억입니다.

이것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물론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총리가 원내대표 시절에 영유아보육법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 원내대표 시절 새누리당 위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상임위 상정도 못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소신이니까 제가 뭐라

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위원이 반대한 것을 그 소신이니까 어쩔 수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최동익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잘 파악이……

○**최동익 의원** 4조 3900억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로비 받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법안소위에서 발목 잡혀 가지고 예산 투명성 확보하는 것도 부결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내대표 시절이신데?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또는 지금 총리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자, 건강보험증 도용하는 문제요, 작년에 4만 5000건 발견되었어요. 건강보험공단 예측으로는 1년에 7500억의 예산이 누수된다고 합니다.

이것 원내대표 시절에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이 법안, 정부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 외에도 민간 건강보험이라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장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앞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24조 원을 쓴다고 그래요.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잘하는 일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잘한 일 맞아요,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잘하고 잘못된 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24조 원을 쓰는데요, 이

중에 10조는 민간 건강보험사…… 재벌들이 내야 될 돈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돈 환수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방산비리합수단이 100일간 발견한 비리금액만 2000억이에요. 예산 낭비는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통영함이에요, 1590억 들여서 투입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억짜리 참치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41억에 납품 받았어요. 이것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부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수, 중복, 부정발급 이런 것들을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총리께서는요, 그것 외에도 R&D 예산이 98%가 성공이라고 그래요. 이것 다 낭비되고 있어요. 어떻게 R&D가 98% 성공입니까?

해외지원사업 전부 다 보면요 총리가 위원장이예요, 이것도. R&D도 총리가 위원장이예요. 그런데 보면요 해외지원사업도 이 부처 저 부처 다 해 가지고 다 예산 낭비되고 있어요. 컨트롤타워이신데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을 해서 R&D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후원금 공식적으로 받은 적 없다고 그랬지요, 성완중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받은 적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받았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비공식도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인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을 관계가 아니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인연이 없어서 안 받았다는 말씀은 드린 적……

○**최동익 의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13일 날 정청래 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망자와 제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연이 없기 때문에 제가 후원금이나 그런 것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인연이 있으면 받으시겠네요?

○국무총리 이완구 인연이 있으면 다…… 정치인들에게 인연이 있어서 후원도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동익 의원 인연이 있으면 받겠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인연이 있으면 관계법 상 법률의 한도 내에서 후원금 받는 것이지요, 정치인은.

○최동익 의원 성완중 의원과 인연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도 본인 스스로 독대 네 번, 그 외에도 만난 횟수가 19회가 있고요. 다이어리라든가 그 다음에 다정하게 찍힌 사진,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인연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인연의 의미는 친소관계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이고,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국회에서 1년 한 수개월 동안에 제가 받은 기록으로는 열한 번 만난 것이 그렇게 나는 이례적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최동익 의원 같은 동향에 같은 당 의원이 인연이 없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 인연이라는 개념을 자꾸 곡해를 하시는데, 친소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예, 들어가시고요.

황교안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최동익 의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가능한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은 과거에도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한 그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현 정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마찬가지로입니다.

○최동익 의원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때 국정원에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 불렀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처장까지를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처장이요? 차장조차 소환 못 했

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못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수사할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익 의원 단서가 없었……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라는 것은 아무나 막 불러 조사하는 게 아니고 소환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정윤희 게이트 때 문고리 3인방 세 사람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중에…… 세 사람 다 소환했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환이나 서면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검찰에서 택하게 되어 있는데……

○최동익 의원 소환은 안 했지요? 이재만 비서관만 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필요한 사람은 소환 조사했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당시에 청와대에서 오 전 행정관에게 조웅천 비서관이 이것 다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강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강요했는지 조사했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확인해 봤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아니, 소환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혐의를 밝혔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환 조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최동익 의원 현직 총리, 현직 대통령비서실장, 살아 있는 권력인데 소환해서 수사하실 가능성 있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수사 방법, 시기 등을 판단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성완중 전 의원의 메모, 녹취파일, 다이어리 이것 증거 안 되나요? 수사의 증거 안 되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그것이 증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지나 다이어리 이런 것은 법률적

으로는 전문법칙에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전문법칙……

○**최동익 의원** 박연차 게이트 기억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문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 진술자가 법정에서 나와서 그 자료를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 회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최동익 의원** 박연차 게이트 기억하시냐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런 전반적인 증거관계에 대해서……

○**최동익 의원** 알겠고요, 알겠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박연차 게이트 기억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무슨 사건 말씀하십니까?

○**최동익 의원** 박연차 게이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박연차 씨가 수사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갑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당했고 그다음에 이광재 전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당한 적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분들이 수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때 증거가 뭐였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그 증거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때 박연차 회장의 진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진술만 가지고도 유죄판결나는 경우가 있고 진술 가지고는 부족하고 다른 자료가 있어야……

○**최동익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녹취 파일이라든가 메모 이게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사안마다 다 다른 것이고, 녹취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지 없어야 된다는지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증거법칙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과거 진상규명 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진상규명하실 건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중에 말씀하셔서……

○**최동익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 모든 일에 진상규명해라라고 하셨는데 뭘 진상규명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본적으로 특별수사팀에서 의혹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성완중 회장이 두 번 사면받은 것 수사하실 건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최동익 의원** 공소시효가 언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공소시효 만료가 언제지요, 그 경우?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경우라는 게 뭘 말씀하십니까?

○**최동익 의원** 성완중 전 의원이 두 번 사면복권받은 것, 그것 수사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언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 또 경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3년짜리도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정치자금법은 몇 년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해당 없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그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최동익 의원** 아까 공소시효에서……

○**법무부장관 황교안**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최동익 의원** 잠깐만요.

정치자금법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났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범행일로부터 5년 내에 시효가 완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사면복권 관련해 가지고 공소시효 끝났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어느 사면복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동익 의원** 성완중 전 의원의 참여정부 당시

사면복권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사면복권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2007년 12월 31일, 공소시효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날로부터 5년은 지났습니다.

○**최동익 의원** 예?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날로부터 5년은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범죄로부터 공소시효 기산이 되는 겁니다.

○**최동익 의원** 그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뇌물죄는 공소시효 몇 년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뇌물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최대 몇 년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성완중 전 의원 고인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수사하실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최동익 의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강구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결국은 공소시효도 없고 대상도 없는 것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수사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증거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최동익 의원** 자, 물어볼게요.

2012년 대선자금, 홍문중……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홍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 2억, 유정복 선거대책총괄본부장 2억……

죄송합니다.

조직총괄본부장 2억,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 3억, 서병수 선거대책총괄본부장 2억, 이것 증거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2억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지요.

○**최동익 의원** 그러면 수사를 하실 겁니까, 일단?

○**법무부장관 황교안** 2억이라고 기재가 된 그 메모지가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최동익 의원** 이것 수사의 단초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성 회장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이 메모 내용, 수사의 단초는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작은 단서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새누리당 대표께서 야당 대선자금 수사하라고 하는데, 수사할 용의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당 대표께서 야당 대선자금 수사하라고 하는데 수사할 용의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은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 수사팀에서는 수사 논리대로, 법대로 수사 진행을 할 것입니다.

○**최동익 의원** 단초가 있나요, 수사할?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 단서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야당 대선자금에 대해서 단초도 없는데 수사를 한다는 게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그렇게 말한 일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여당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메모가 나왔어요. 수사한다면 단초가 되겠지요? 그런데 야당 대선자금에 대한 그 어떤 단초 나온 것 없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다양

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하고 검토해서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들어가 주시고, 이완구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날 부패척결을 부르짖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최동익 의원** 18일 날 경남기업이 압수수색당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22일 날 성완중 전 의원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성완중 전 의원의 전화를 받는 게 총리로서 옳은 행동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 시절부터…… 아까 여러 차례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셨다시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했기 때문에 전화 안 받을 이유는 없지요, 제가.

○**최동익 의원** 잘 몰랐고 인연도 없었다고 하는데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람을 총리 입장에서 전화를 받는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로 받으신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총리도 개인적인 관계든 직무와 관련된 전화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동익 의원** 그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3000만 원이면 기억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그 말씀 하신 것?

○**국무총리 이완구** 3000만 원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것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최동익 의원** 청문회 당시에 ‘충청 총리 낙마 하면 총선·대선 두고 보자’ 플래카드 걸린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것은 보도를 봤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일시에, 동시에 꼭 충청도 일대에 깔렸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최동익 의원** 한 3억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최동익 의원** 한 1억은 될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3000만 원만 돼도 기억을 하는데 수억 원을 들여 가지고 청문회 당시 총리를 이렇게 지원한 사람,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세상에 성완중 회장이 이완구를, 이완구 때문에 수억의 돈을 들여서 무슨 플래카드를 붙였겠습니까? 여기 함께하신 충청권 의원님들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신 충청권 여야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것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충청권에 천몇백 장이 붙었다면 그게 충청권 시군 다 해 봐야 한 30여 개 될 텐데, 여기 여야 의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십칠팔 명의,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난 것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분이 몇 억을 써서 저에게, 저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과한 말씀 같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러면 동시에, 일시적으로 같은 문구가 걸렸어요. 이것 누가 중앙에서 컨트롤한 것 없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사발통문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관심 없다 이거지요, 누가 했는지?

○**국무총리 이완구** 그 발단은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총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청 총리라는 말씀이 그 당시에……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관심 없다는 얘기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최동익 의원** MBN하고 채널A 언급하시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MBN하고 채널A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MBN하고 채널A에서, 제가 전화를 했던 태안군 의장님의 멘트를 말씀 올리는 겁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MBN하고 채널A 제가 계속 보니까 이완구 총리님에 대해서 좋은 내용 안 나오던데요, 거의 대부분?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가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희 의장님.

○**최동익 의원**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 사정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무척 어렵습니다.

○최동익 의원 한류와 K-pop 그리고 강남스타일 이런 것으로 국가 브랜드가 업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브랜드가 어떻게요?

○최동익 의원 국가 브랜드가 상승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그런데 요즘 경제 어렵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동익 의원 그러면 이번 총리님 사태 관련해 가지고 외국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최동익 의원 총리님이 하도 방송을 얘기하시기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미국의 FOX 뉴스,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세인트 루이스 투데이, 일본에서는 마이니치, 니케이, 요미우리, 산케이, NHK, 중국에서는 인민일보, CCTV, 신화통신, 전부 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

○최동익 의원 외국 언론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계시는지 아냐고요? 총리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고 국가 브랜드가 전락당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

○최동익 의원 제목이 뭘 줄 아세요? 총리님, 얘기 안 나옵니다. ‘박근혜 정권 실세 게이트’, ‘박근혜 정권 비리 게이트’, ‘한국 정부 비리 게이트’ 제목이 그래요.

이렇게 외국의 언론에도 지금 이 난리인데 총리께서 현직 총리로서 또 현직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검찰에 출두되면 또 전 세계 언론 다 탈 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기업 수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올까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최동익 의원 박근혜정부 임기 얼마 남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2017년 12월 달이 대선입니까? 그러면 2018년 2월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익 의원 약 3년 남았어요.

이번에 깨끗하게 이병기 실장하고 이완구 총리님 물러나시고 무죄를 입증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익 의원 현직 총리, 현직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전 세계에 다 보도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가지고 먹고사는 나라라고 늘 주장하시지요? 이렇게 총리님 때문에 이런 망신 당하고 국가브랜드가 실추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걱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익 의원 총리님은 애국자 아니신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실 생각 없으세요, 본인이 정 억울하더라도?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최동익 의원 본인이 총리직 그만두면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최동익 의원 그만둬도 밝혀지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만두든 안 그만두든 밝혀질 겁니다.

○최동익 의원 그만두시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사태를 몰고 가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세상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밝혀질 겁니다.

○최동익 의원 그만두시고 밝히시라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진실은 밝혀집니다.

○최동익 의원 들어가세요.

총리나 현직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두되는 모습, 전 세계 언론에 실시간으로 방송될 때 과연 북한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역사 왜곡 문제를 빚고 있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출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국과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뭐라 하겠습니까?

이완구 총리님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님, 더 이상 국가 브랜드가 추락되는 일은 없도록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출신의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열 의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과 함께 또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눈물의 올림픽입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과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다섯 번째로 그랜드슬램을 이룬 영광의 쾌거였고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10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잉 투자, 분산 개최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 왔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강원도민은 도민대로 지쳐 쓰러져 가고 있고, 심신은 탈진하여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 속에 담은 분노와 가슴앓이는 새로운 총리 취임으로 많은 문제와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종결되었고,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은 몸을 추스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발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대표에 의해 새롭게 분산 개최라고 하는 제론은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또한 혼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한 국가 대행사 중 이토록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을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치적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약자라 하더라도 무대접·푸대접의 강원도 무시, 강원도 홀대의 연장선이 아닙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써 국가의 재원이 잘 아껴 쓰이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 또한 올림픽경기장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분산 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

인 방안을 찾아서 저는 결정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올림픽에 대한 그동안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고 새로운 동계올림픽과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그동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께서 부임하셔서 그래도 잘 안정돼 가고 있고 잘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올림픽 개최지 국회의원으로써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고요, 또 각종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7종의 올림픽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 선 일부 반대론자들은 실질적으로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줄도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문제 중에서 올림픽에 대한 과잉투자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새로 경기장을 짓거나 보완해야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동열 의원** 또 예산이 8조에서 13조로 늘어났다고 하는, 잘못된 진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비드(bid) 파일을 우리가 낼 때 8조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유치가 된 뒤에 13조가 된 것은 그동안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예산을 거기에 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올림픽 예산을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13조가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3조 중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 운영비 2조 245억을 빼면 실제로 11조 340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 34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와, 접근도로 SOC 사업

을 빼게 되면요,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돈은 6993억입니다. 따라서 75%의 국가 부담은 5245억입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돈입니다마는 마치 국민의 혈세를 다 붓는 것처럼 그리고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염동열 의원 두 번째로 분산 개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동안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느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시다만 이제 올림픽이 채 3년도 남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분산 개최의 논란은 사실 굉장히 혼란을 부추기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가 얼마 안 남았으니만큼 이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분산 개최를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몇몇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운힐(downhills)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현재 정선 지역밖에는, 표고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는 데가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분산 개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 IOC 위원장이 작년 11월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작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든지 재작년에 얘기했다든지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었던 상황이기에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다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염동열 의원 사실 IOC 위원장인 바흐가 2020 어젠다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분산 개최가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시다마는 발표 이후에 국외 분산, 국내 분산의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또 여러 가지 경기장마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장관님의 말씀인데 무주스

키장을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산 개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선의 활강 경기장을 무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FIS(세계스키연맹)에서 여기는 부적격으로 판단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키장에서 경기를 치르려고 한다면 지금 도표에 나오신다마는 상단부에 몇백m의 철탑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하단부에는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건설비가 들어가 있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2월 달이 되면 실질적으로 무주는 눈이 녹게 됩니다. 이 경기가 2월 하순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분산 개최, 무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분산개최론자들이 무주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오만이거나 이것은 독선이다, 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염동열 의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대회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동안에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케이스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후관리의 주체인 강원도와 저희 정부가 잘 협력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저는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론 경기장과 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잘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 올림픽이 개최되는 개최도시, 그 올림픽 배후도시가 강한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춘다고 한다면 지속발전 가능한 올림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기장과 올림픽 레거시(legacy)는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사후활용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 배후도시 그리고 문화관광 올림픽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도 존경하는 염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로 변신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변환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 이벤트가 벌어지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또 그 이후에도 그것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우리 장관께서는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한다고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는 그렇게……

○**염동열 의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요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간에 여러 가지 빅 스포츠 이벤트를 해 왔습니다. 그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다 성공시켰던 적이 있고 한 번도 그것이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또 그만한 인적인 자원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올림픽도 걱정은 크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염동열 의원** 저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킬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재미나고 흥미난 일을 발견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11개국에 22개의 도시가 되는데요, 대부분 일본의 나가노와 삿포로를 제외하고 나서는 유럽과 인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이 넓고 개최 도시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적게는 3만에서 많으면 한 50만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와 도시 간 2시간 안의 광역인구를 우리가 집계해 해 보니까 100만 명 정도 이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접근 인원이 많아 봐야 이삼백만 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바로 올림픽이 유럽에서 열리고 또 그 실패한 원인은 바로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는 재미난 것을 발견했고요, 최근에 2014년도 소치 올림픽을 보게 되

면 소치의 시내 인구가 34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2시간 안에 그 인구를 다 이렇게 집합을 시켜 보니까요, 74만 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밴쿠버, 잘 아시겠습니다만 57만 8000명인데요, 밴쿠버 도시 인구가, 그 인근 2시간 반 안에 있는 인원을 다 합쳐도 357만 8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나가노라든가 또 인스부르크라든가 또 릴레함메르는 실질적으로 100만 명이 안 됩니다. 나가노는 물론 동경까지 한 2시간 반 거리에서 1200만 명 됩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유럽의 동계 올림픽이 실패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 올림픽은 다른 위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2017년도가 되면 1시간대에 평창을 갈 수가 있고 강릉을 갈 수가 있고 정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혁명입니다. 따라서 2500만의 수도권에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것은요, 거의 3000만 명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사용해 될 만한,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시설 활용 면에서도요.

또 2시간 반에 올 수 있는 아시아 인구가요, 20억 명입니다, 20억 명. 중국이 10억 명 되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 11개국 22개 도시의 실패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올림픽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마지막 각오의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올림픽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가외의 것들을 우리가 얻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최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 또 예술, 관광 같은 것들을 그런 역량을 세계인들과 나누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갖고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을,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또 홍보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염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4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염동열 의원** 올림픽에 대한 문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 그리고 평창이 올림픽을 유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올림픽의 유치는 우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의 어떤 계기를 만들고 국가의 브랜드를 장기적 관점에서 향상시키는 그런 다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동열 의원**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4대 슬로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그것까지는……

○**염동열 의원** 문화와 환경·평화·경제 올림픽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염동열 의원** 저는 올림픽을 적어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의 목표 또 개최하는 도의 목표 그리고 개최 도시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요,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2개의 어젠다를 가졌습니다. 스포츠 산업 국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런던 도시의 동부 지역을 유럽의 심장부로 만든다는 어젠다를 가졌습니다.

런던시도 국가와 케를 같이 해서 동부 지역을—빈민가 아니겠습니까—도시를 재생시켜야 되겠다, 도시를 재생시켜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림픽존 그리고 센트럴존, 리버존 이렇게 3개 존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 세계 속에 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올림픽도 액션플랜을 가지고 국가와 또 개최 도시와 개최 도가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올림픽이 단순한 17일간의 축제가 아니라 또 단순한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올림픽이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을 창의적인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염동열 의원** 저는 올림픽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국격이 실추됐는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국격을 찾자.

실질적으로 1년 전에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의, 실추된 나라를 봤습니다. 이 올림픽을 통해서 나라의 품격을 찾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염동열 의원** 나라가 돈을 버는 데에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많은 기술상품을 세계에 파는 것이고요. 또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두 가지로 보는데 저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의 신성장동력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상품을 팔아서 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부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IT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IT 강국으로서의 재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광 대국으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4400만 명의 관광 외국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저는 새로운 관광 한국을 만들어 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공감합니다.

○**염동열 의원** 세 번째로 저는 스포츠 강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유럽까지 올림픽에 대한 시장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도 좀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가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세계 속의 새로운 문화 관광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탄생해야 한다,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공감합니다.

○염동열 의원 올림픽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말로만 하던 관광 1번지 그리고 이제 100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지역 균형발전, 강원도의 발전과 올림픽 개최지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께서 올림픽 개최 도시 그리고 올림픽 개최 도시에 있는 폐광지 도시 재생, 런던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 재생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답변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염동열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끝으로 올림픽에 대한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 올린 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을 잘 살펴서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동계올림픽은 이제 우리 한국 성장의 새로운 시대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1분 정도 말씀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염동열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게 아마 이번 4일간의 대정부질문에 총리가 마지막 답변을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4일 동안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총리의 답변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성의껏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불찰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질타의 또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방금 전에……

이 4일 동안의 대정부질문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문제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간간히 비서관들한테 메모로 보고받고 돌아가는, 이번 성완중 회장의 죽음에 대한 거를 파악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이 못 났다는 점 말씀을 올리고.

특히 방금 전에 제가 문제의 3000만 원 건에 대해서 우리 비서관, 그 당시에는 균의원이 돼서 저를 밀착 수행했던 사람이 아침에……

기자회견한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막 보고를 받으니까, 현지에서 보고를…… 운전기사가 그런 진술을 반박하는 자기네들끼리 기자회견 있는 걸 막 지금 보고를 받았습시다만, 그중에 중요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변하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의원님들 같이 다 선거를 치러 봤습시다만, 선거사무실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주로 음료수를 갖고 옵니다. 박카스라든가 비타500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충 그 선거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적어 놓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 선거 경험칙에 의할 것 같으면 받아서 고맙습시다하고 적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누가 갖고 왔는지 적어 놓습니다.

그것은 음료수가 있을 수도 있고 과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빵이 있을 수도 있고, 대개 그런 성의 표시니까 적어 놓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온 얘기로는 그 비타박스인가 그것을 가지고 제 방에 와서 독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완중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독방이 됐든 칸이 있는 데가 됐든 그 박스 한 박스를 들고 부자연스럽게 저를 만나러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경험칙상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니까 선거운동 때 누가 박스 한 박스, 그것 비타500이든 박카스 하나 딱 들고 후보자 방으로 들어옵니까? 거기다 딱 내려놓고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장부에 기록하게 하고 만나려면 혼자 홀몸으로 들어오지 비타박스 한 박스를 들고 후보자 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경험칙상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선거를 많이 치러 봤던 입장에서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선거를 수도 없이 한 경험칙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더군다나 현직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거기다 돈을 넣었다면 그것 박스 하나 들고 후보자 방에 들어와서 그것을 놓고 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좀 어색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장황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 올렸다는 것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송합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감사합니다.

○염동열 의원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세계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매우 각별하고 소중한게 생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있어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 대관령의 한 청년이 88 서울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동계올림픽의 꿈을 키워 왔고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을 시작했고 3년의 삼수 끝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은 저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올림픽을 잘 치러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세계 속에 알려졌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듯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더 선진된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염동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우리 평창 올림픽 꼭 성공하시고 그 사후에 잘 활용되어서 우리 국가 민족에 큰 득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마지막입니다만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총리님을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1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희	권은희
권근희	길정우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재원	김제식	김춘진
김태년	김학용	김한표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범계
박상은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설훈	송호창	신경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철수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배
이채익	이춘석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한명숙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철호
황주홍			

반대 의원(2인)

김진태 안홍준

기권 의원(2인)

김 성 찬 박 명 재

○출석 의원(262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용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 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덕 광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자스민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중 결	이 중 배
이 중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용 기	정 우 택	정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32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우 남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희 국
김 회 정	나 성 린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범 계	박 성 호	박 영 선	박 인 숙
박 흥 근	배 덕 광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계 룬
신 정 훈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철 수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의 동	윤 명 희	윤 재 옥	윤 재 옥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종배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해찬
 이현승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정문현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영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한명숙 한정애 홍문종
 홍일표 홍철호 황우여 황주홍

○속개 시 재석 의원(71인)

강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상훈
 김성곤 김승남 김재경 김재원
 김제식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현 김희정 나경원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민병주 박명재
 박병석 박성호 박인숙 박홍근
 백재현 서영교 설훈 송영근
 신경림 안규백 양창영 유대운
 윤호중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미경 이상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종배 이종훈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현승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용기 정청래
 조명철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하태경 홍철호 황영철

○산회 시 재석 의원(64인)

강길부 강창일 김광림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민기 김상훈
 김성곤 김세연 김을동 김재원
 김춘진 김태원 김한표 김희정
 노철래 류지영 민현주 박맹우
 박병석 박성호 박인숙 박지원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효대 양창영 염동열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재중
 이에리사 이완구 이우현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훈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현승
 전정희 정두연 정세균 정의화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최동익
 최재성 함진규 홍문표 황우여

○청가 의원(10인)

박대출 박윤옥 송광호 안민석
 유일호 윤후덕 이주영 정수성
 최경환 한기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완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법무부장관 황교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출석 정부위원

교육부차관 김재춘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고사항】

○의안 제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홍익표 · 이원욱 · 박주선 · 김승남 · 인재근 · 진성준 · 박홍근 · 추미애 · 안규백 · 문희상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홍익표 · 이원욱 · 박주선 · 김승남 · 인재근 · 진성준 · 박홍근 · 추미애 · 안규백 · 문희상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홍익표 · 이원욱 · 박주선 · 김승남 · 인재근 · 진성준 · 박홍근 · 추미애 · 안규백 · 문희상 의원 발의)

이상 3건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한정애 · 배재정 · 이찬열 · 이학영 · 심재권 · 진선미 · 심상정 · 최규성 · 박홍근 · 박민수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한정애 · 배재정 · 이찬열 · 이학영 · 심재권 · 진선미 · 심상정 · 최규성 · 박홍근 · 박민수 의원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송영근 · 유승우 · 김장실 · 김세연 · 양창영 · 류지영 · 권성동 · 황영철 · 김성찬 · 정희수 의원 발의)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명재 · 이철우 · 조현룡 · 박상은 · 이노근 · 정두언 · 강은희 · 박덕흠 · 강석호 · 이만우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최동익 · 양승조 · 추미애 · 전순옥 · 최민희 · 심재권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최동익 · 양승조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5. 4. 15 정부 제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 · 운행 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2015. 4. 15 김동철 · 이석현 · 김윤덕 · 이개호 · 조정식 · 최재성 · 문병호 · 이상직 · 노웅래 · 김광진 · 유승민 · 우윤근 · 주승용 · 안규백 · 강동원 · 최원식 · 김영환 · 김춘진 · 이학영 · 문재인 · 인재근 · 심재권 · 한정애 · 김우남 · 은수미 · 김승남 · 박민수 · 박주선 · 황주홍 · 김정록 · 문정림 · 김현숙 · 경대수 · 김종태 · 강석호 · 김무성 · 김태호 · 김기식 · 강기정 · 진영 · 이한성 · 김광림 · 손인춘 · 박원석 ·

박맹우 · 정문헌 · 이종진 · 류성걸 · 강석훈 · 전정희 · 전순옥 · 부좌현 · 김기준 · 백재현 · 홍익표 · 노영민 · 김태년 · 배재정 · 홍영표 · 이춘석 · 김관영 · 임내현 · 민홍철 · 홍의락 · 최재천 · 설훈 · 진성준 · 신정훈 · 송호창 · 유성엽 · 길정우 · 김한표 · 김중훈 · 정수성 · 박성호 · 이진복 · 염동열 · 박인숙 · 윤명희 · 문희상 · 정세균 · 안철수 · 이원욱 · 우원식 · 김영주 · 이윤석 · 이찬열 · 진병헌 · 유인태 · 김상훈 · 이강후 · 이채익 · 정두언 · 조경태 · 추미애 · 정호준 · 김민기 · 홍종학 · 박남춘 · 박혜자 · 윤후덕 · 權垠希 · 오영식 · 윤호중 · 신계륜 · 신학용 · 원혜영 · 남인순 · 박영선 · 장병완 · 최규성 · 김성곤 · 박지원 · 이정현 · 주영순 · 김영록 · 김성주 · 유기홍 · 유은혜 · 이인영 · 임수경 · 안민석 · 민병두 · 이목희 · 박광온 · 최민희 · 진선미 · 이미경 · 유승희 · 김경협 · 정성호 · 이종걸 · 김상희 · 홍지만 · 김용익 · 최동익 · 윤관석 · 박홍근 · 신경민 · 서영교 · 강창일 · 이언주 · 함진규 · 한명숙 · 신기남 · 김현 · 이상호 · 김현미 · 정청래 · 백군기 · 도종환 · 전해철 · 유대운 · 정희수 · 박기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최민희 · 심재권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민홍철 · 최재성 · 양승조 · 전정희 · 조경태 · 최원식 · 박주선 · 황인자 · 부좌현 · 송영근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최동익 · 추미애 · 전순옥 · 심재권 · 최민희 · 윤관석 · 박남춘 · 김기식 · 김광진 · 조정식 · 양승조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심재철 · 권성동 · 김영우 · 김용남 · 나경원 · 양창영 · 이강후 · 이철우 · 정미경 · 조명철 · 주호영 · 홍철호 · 황영철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박남춘 · 김현 · 안민석 · 유대운 · 이개호 · 이찬열 · 김성곤 · 신경민 · 진선미 · 원혜영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5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5 박영선·이종걸·박범계·김현미·서영교·박홍근·안민석·김광진·강동원·전해철·박기춘·신기남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휴회의 건

(2015. 4. 16 의장 제의)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6일간)

○의안 심사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2015. 4. 7 우원식·강기정·강동원·강석호·강창일·權垠希·길정우·김경협·김관영·김광진·김기선·김기식·김기준·김동철·김명연·김민기·김상희·김성곤·김성주·김세연·김승남·김영록·김영주·김영환·김용익·김우남·김윤덕·김을동·김재윤·김제남·김정록·김춘진·김태년·김태원·김한길·김현·김현미·남인순·노영민·노웅래·도종환·문병호·문재인·문희상·민병두·민병주·민홍철·박광온·박기춘·박남춘·박민수·박범계·박병석·박수현·박영선·박완주·박원석·박주선·박지원·박혜자·박홍근·배재정·백군기·백재현·변재일·부좌현·서기호·서영교·서용교·설훈·송호창·신경민·신계륜·신기남·

신의진·신정훈·신학용·심상정·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철수·양승조·오영식·오제세·우상호·우윤근·원혜영·유기홍·유대운·유성엽·유승희·유은혜·유인태·윤관석·윤재옥·윤호중·윤후덕·은수미·이강후·이개호·이노근·이명수·이목희·이미경·이상민·이상직·이석현·이언주·이원욱·이윤석·이이재·이인영·이종걸·이주영·이찬열·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헌승·인재근·임내현·임수경·장병완·장하나·전병헌·전순옥·전정희·전해철·정두언·정병국·정성호·정세균·정수성·정진후·정청래·정호준·조경태·조정식·주승용·진선미·진성준·최규성·최동익·최민희·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하태경·한명숙·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홍종학·황인자·황주홍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조속통과에 관한 청원

(2015. 4. 15 대구 동구 지저동 764-6 박정숙 으로부터 서영교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